

이 자료는 2012년 6월 28일(목)
16: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12. 6. 28

관계부처 합동

순서

I. 상반기 정책 대응과 평가	1
II. 향후 경제여건	4
1. 대외 경제여건	
2. 국내 경제여건	
3. 향후 경제전망	
III.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13
IV. 하반기 7대 핵심 추진과제	14
[붙임1]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과제 세부내용	
[붙임2] 부처별 정책과제와 추진계획	

1. 상반기 정책 대응과 평가

1. 상반기 정책대응

◇ 「2012년 경제정책방향」(11.12월)에서 제시된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

- (글로벌 재정위기 대응)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기흐름을 보완하고 경제체질 개선 노력 지속
 -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60% 목표)을 적극적으로 추진
 - * 5월말 현재 계획 대비 1.7%p 초과한 48.9% 집행(총 135.4조원 집행)
 - 유럽 재정위기,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충격 발생시 국내외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상황별 대응방안 재점검
 -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2.27), 저축은행(4개) 영업정지 조치(5.6) 등 부문별 취약요인에 선제 대응
 - IMF 재원확충(1,560억불), CMIM 규모 확대(1,200→2,400억불), 위기에방기능 도입 등 금융안전망 강화를 주도
- (내수활력 제고) 대외여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미세조정 노력
 - 기업투자 활성화(4.26/5.1) · 주택거래 정상화(5.10) · 기업애로 해소(5.23) 방안 등 마련
 - 창업 ·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12.2~1월중 5차례 대책), 가정용 상비약 약국의 판매 허용 등 내수기반 강화
- (수출경쟁력 강화) FTA와 제2중동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시장 창출
 - 한-미 FTA 발효(3.15), 한-중 FTA 협상 개시(5.2) 등 경제영토 확장과 FTA 활용지원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FTA 활용 극대화
 - 제2중동붐에 대비한 금융지원(3.15) · 인력진출(2.21) 방안 강구

- (미래투자 가속화) 인구 등 미래구조변화에 대비하고 대외위상 강화
 - 3~4세 누리과정 도입(13년), 0~2세 양육수당 확대(13년부터 하위 70%) 등 보육지원 확충
 - 에너지 효율 제고(1.2)·석유소비 절감(5.23) 등 녹색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중장기 전략위원회 출범 등 미래대응 인프라 구축
 -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3.26~27)를 성공적으로 개최
- (생활물가 안정) 물가관계장관회의 운영('12.1~6월간 19회), 물가 안정책임제 시행 등 전방위 물가안정 노력 경주
 - 농산물 수급 차질 등 단기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석유 제품 유통구조 개선(4.19) 등 구조적 정책과제도 병행
- (일자리 창출) 정부 일자리사업·청년전용 창업자금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고졸채용을 적극 확대
 - 체감 고용여건 개선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선정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마련(5.1)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을 입안하는 등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월)을 차질없이 준비
- (생계비 경감) 교육·주거·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1.75조원) 지원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척결에 매진('12.4월~)
 - 금리우대 보증자리론·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 주거비 경감(5.10)
 -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 가격 인하('12.4월, 평균 11%↓),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찰료 감면 등 서민 의료비 부담 완화
-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제도를 확충하면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대응
 - 복지 T/F('12.1~6월간 4차례)를 통해 신규 복지제도 착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치권의 복지공약 분석과 재원마련 방안 등 검토

2. 평 가

◇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와 미세 조정(fine tuning)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 운용에 주력

-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위기대응·체질개선·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 정책 대응이 필요

□ 어려운 대외여건에서도 고용·성장·물가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대외충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

-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1/4분기 성장률이 개선(전기 대비 0.9%↑)되고 고용호조세 지속

- * 소비자물가 상승률(%): (11.6)4.2 (11.8)4.7 (12)4.2 (12.1)3.4 (3)2.6 (5)2.5
- * 취업자증감(전년동월비, 만명): (11.12)11.1 (12.1)53.6 (3)11.9 (4)15.5 (5)17.2
- * 12.5월에 사상최초로 취업자 2,500만명 시대 진입, 최단기간내 취업자 100만명 증가

-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1.13), 유가상승, 북한 미사일 발사(1.13), 그리스 1차 총선(5.6)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등 대외충격을 비교적 큰 무리 없이 흡수

- 자본 유출입과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

- * 전일대비 환율변동성(%): (09)0.69 (10)0.57 (11)0.48 (12.1~5)0.35

-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가운데 양호한 펀더멘탈을 인정받아 신용등급 전망이 상승(12.4월 Moody's)

□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반기 정책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

- 만일의 사태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사태의 장기화를 전제로 가계부채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
- 고용·경기 회복세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부문별 대응 강화 필요

특히,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여력 축소가 경기 회복흐름을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강구

-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노력 지속

II. 향후 경제여건

1. 대외 경제여건

◇ 올해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서 여건이 악화

① (세계경제)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유로존 불안이 심화되면서 하방위험이 확대

○ 선진국은 미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유로지역 부진이 지속

미국은 민간소비를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개선 지연이 회복속도를 제약

유로지역은 금융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긴축, 정치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실물경제 침체 심화 우려

- 일본은 지난해 대지진과 태국 홍수 등에 따른 공급차질 완화,
재건사업 소요 등을 바탕으로 점차 회복 예상

○ 중국 등 신흥국은 글로벌 경기 약화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나서는 모습

* 중국·인도는 올해 들어 각각 지급준비율을 1.0%, 1.25% 인하하고,
중국·인도·브라질·호주 등은 정책금리를 인하

- 브라질, 인도 등은 수출둔화, 투자위축 등으로 급속히 악화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실 적			전 망			
	'11년		'12년	'12년 연간		'13년 연간	
	연간	F1	F1	IMF	OECD	IMF	OECD
세계경제 성장률	3.9			3.5	3.1	1.1	1.2
미 국(전기비연율)	1.7	3.0	1.9	2.1	2.1	2.1	2.6
유 로(전기비연율)	1.1	△1.2	0.0	△0.3	△0.1	0.9	0.9
일 본(전기비연율)	△0.7	△0.7	1.1	2.0	2.0	1.7	1.5
중 국(전년동기비)	9.2	8.9	8.1	8.2	8.2	8.8	9.3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12.1월), OECD Economic Outlook('12.5월)

② (국제금융시장) 그리스·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

- 그리스 긴축안 재협상,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 재정위기국 국채만기 도래 일정 등에 따라 시장불안이 반복되고 근본적 해법 도출이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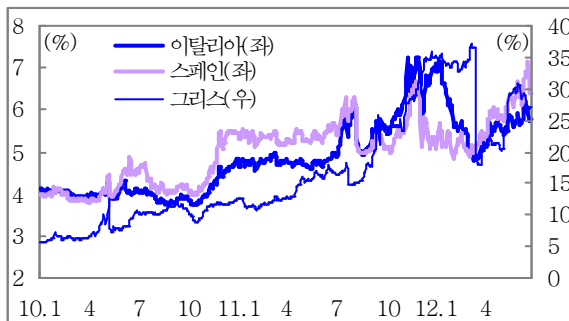
※ 국채만기도래(억유로, '12.6월 기준)

스페인: ('12.6)102.6 (7)306.4 (8)99.6 (9)90.5 (10)335.5 (11)39.6 (12)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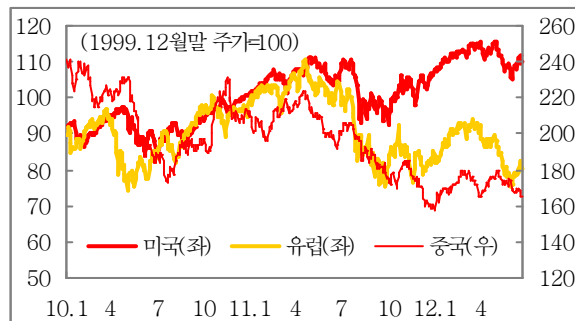
- 이탈리아: ('12.6)273.8 (7)380.3 (8)398.9 (9)353.5 (10)386.1 (11)317.2 (12)171.9

- EU·ECB·IMF와 유로존 회원국 등의 정책대응에 따라 불확실성 완화 정도와 시기가 좌우될 전망

재정위기국의 국채금리



주요국 주가 추이



③ (국제원자재가격)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등은 다소 안정되는 모습

- 국제유가는 올해초 이란 핵 사태 등으로 초강세를 보이다가 OPEC 증산,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100\$/B 아래로 하락
- 하반기에는 美·EU의 이란제재 발효, 유로존 불확실성 지속 등 상하방 요인이 함께 존재하여 큰 폭의 등락은 제한될 전망

국제유가 전망(\$/B, 기간평균)

기관 (전망시점)	유종	'11년	'12년				
			연간	1/4	2/4	3/4	4/4
CERA('12.6월)	Dubai	106.1	101.0	116.1	105.6	90.0	92.1
PIRA('12.5월)	Brent	111.3	111.7	118.5	111.6	107.0	109.7
EIA('12.6월)	WTI	91.9	96.8	102.9	95.3	93.0	96.0

※ 자료: CERA(미국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 PIRA(석유산업연구소), EIA(미국 에너지정보청)

- 국제곡물가격은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이나 대두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은 강세 지속

2. 국내 경제여건

◇ 우리 경제는 고용개선 지속,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가 아직 미약하고 대외여건에 따른 하방위험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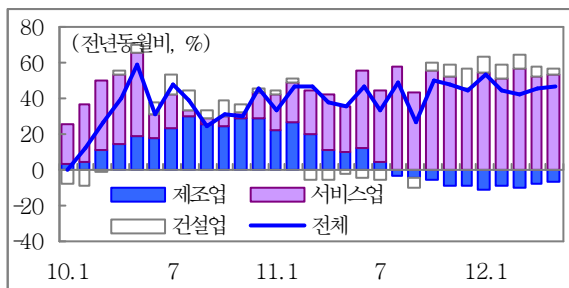
① (고용) 취업자수가 4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개선세 지속

- 보건·복지, 교육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 (올해 들어 감소세는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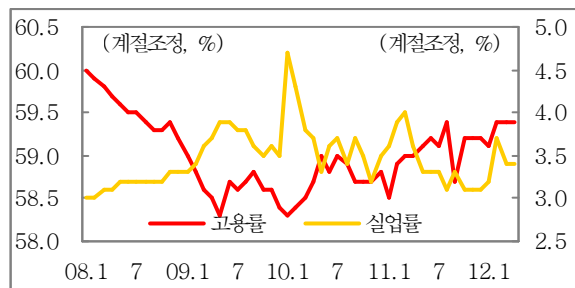
맞벌이 가구 증가,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후 경제활동 지속 등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진행

-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개선되고 실업률도 안정

산업별 취업자 증감



고용률과 실업률



② (내수·수출)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로 수출이 둔화되었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1/4분기 성장률이 다소 회복

* 성장률(전기비, %): (11.1/10.3 (2/10.8 (3/10.8 (4/10.3 (12.1/10.9

- 지난해 4/4분기 위축되었던 소비, 투자 등 내수항목들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회복세는 미약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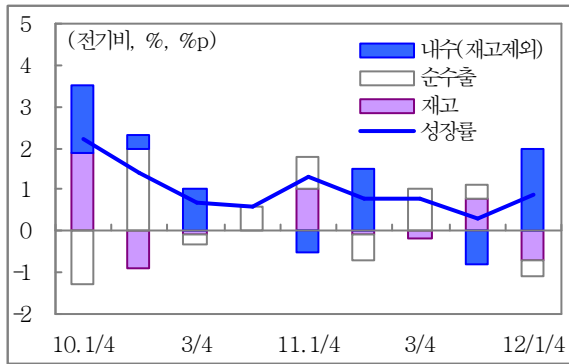
- 재고증가폭이 줄면서 성장을 제약하였으나 향후 생산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 수출이 유럽·중국을 중심으로 둔화되었으나 일평균 수출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여 대외여건 악화에 비해서는 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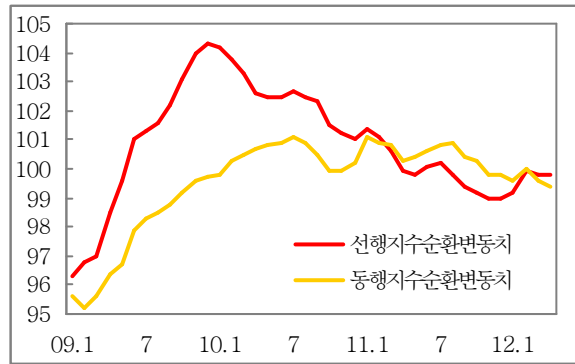
* 일평균수출(억불): (11.1.1~6.22)20.2 (12.1.1~6.22)20.3

- 경기선행지수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심리위축 등으로 회복세 지연 우려

성장률과 성장기여도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③ (물가·부동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으며 주택가격 상승세도 둔화되었으나 주택거래 부진이 지속

○ 유가하락,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과 정책효과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크게 둔화

– 다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고 이상기후, 이란 정세 등 불안요인 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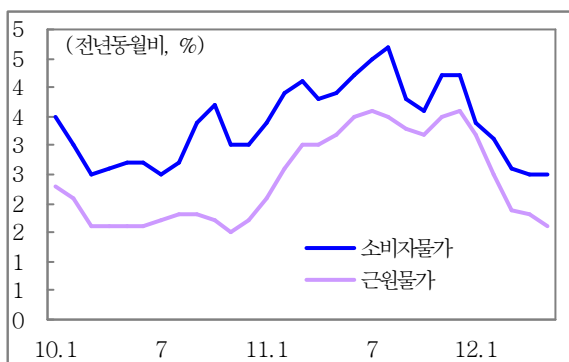
* 기대인플레이션율(%): (11.12)1.0 (12.1)1.1 (2)1.0 (3)3.9 (4)3.8 (5)3.7 (6)3.7

○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세, 전세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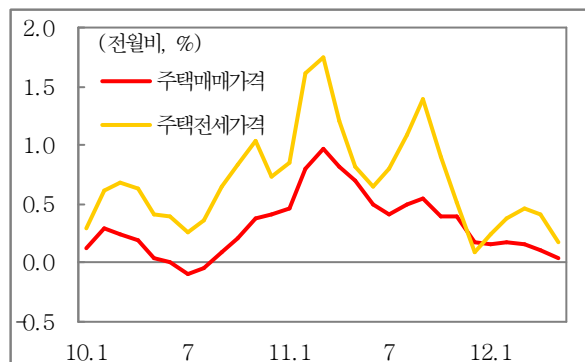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 종료(11년말) 영향으로 연초 급감한 이후 최근 다소 회복세이나 예년보다 부진

* 아파트매매(만호): (11.11)5.5 (12)7.7 (12.1)1.8 (2)3.9 (3)4.7 (4)4.5 (5)4.6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④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서 변동성이 확대

○ 주가는 올해 초 상승세를 보이다가 4월 이후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존 상황 전개에 따라 비교적 큰 폭의 등락을 반복

-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이 5월중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큰 폭 유출되었으나 6월 들어 유출세가 크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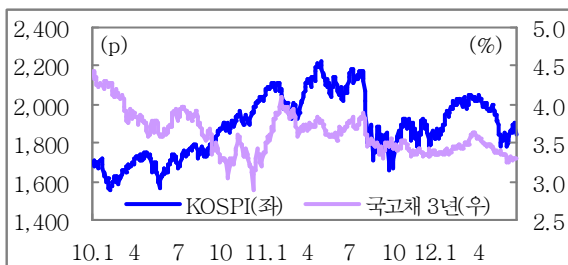
* 외국인 주식 순매수(조원): (12)16.2 (23)9 (30)9 (1)△0.6 (5)△3.1 (6.1~25)△0.2

○ 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 하락세, 외국인 채권투자 순유입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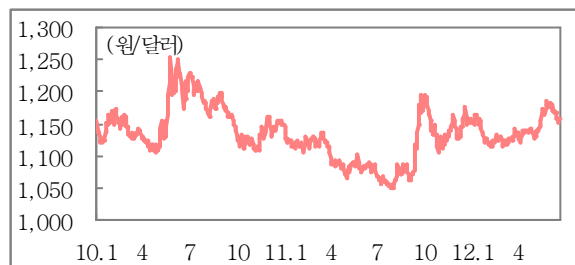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유로존 불안 확산, 안전통화 선호,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1,100원 중반대로 상승한 후 횡보

○ 가계부채는 주택거래 부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증가세가 둔화

주가·금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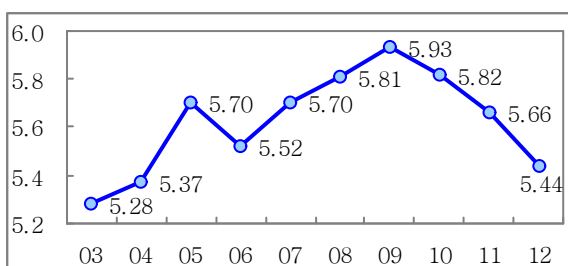
⑤ (소득분배) 고용회복, 임금상승, 물가안정 등에 힘입어 가계소득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이 '04년 이후 가장 개선되는 등 소득분배가 개선

* 1/4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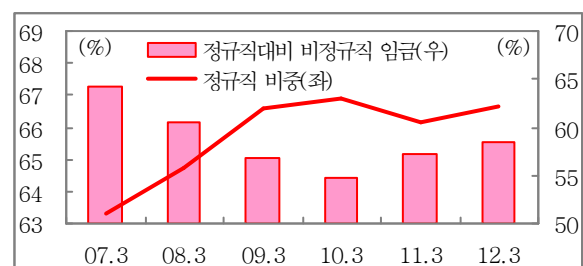
(전체평균)6.9 (1분위)9.3 (2분위)8.6 (3분위)8.7 (4분위)8.1 (5분위)11.5

○ 취업자 중 상용직과 정규직 비율이 상승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도 축소

소득5분위 배율(매년 1/4분기)



정규직 비중과 비정규직 임금 수준



3. 향후 경제전망

① 2012년 하반기와 연간 전망

- (고용) 서비스업·상용직을 중심으로 높은 고용개선세가 지속되면서 당초 전망(28만명)보다 높은 연간 40만명 증가
- (성장)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본격 회복이 지연되어 당초 전망(3.7%)보다 낮은 연간 3.3% 성장
- (물가)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안정기조가 확산되면서 연간 2.8% 상승
- (경상수지) 수출 둔화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되겠으나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가 개선되어 연간 180억불 흑자

② 2013년 전망

- (고용·성장)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 등으로 연간 4.3% 성장하고 취업자수는 33만명 증가
- (물가) 경기회복으로 수요압력이 높아지면서 연간 3.0% 상승
- (경상수지) 내수·소득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흑자규모가 줄어들어 연간 150억불 흑자

	2011년	2012년		2013년
		(당 초)	(수 정)	
▪ 취업자증감	42만명	28만명	40만명	33만명
▪ 실질성장률	3.6%	3.7%	3.3%	4.3%
▪ 소비자물가	4.0%	3.2%	2.8%	3.0%
▪ 경상수지	265억불	160억불	180억불	150억불

[참고 1]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에 따른 정책대응 기초

① 현 정부 출범 이후 2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역량을 결집

- 글로벌 차원의 경제위기가 2~3년의 짧은 간격을 두고 연이어 발생한 것은 유례가 없음
- 아울러, 지금의 위기 상황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성격이나 전개양상 등에서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위기로 평가

② (위기의 성격과 전개양상) 충격이 단기에 집중되고 큰 폭으로 확산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지금은 위기가 국면이 상시화·장기화되는 양상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 부실이 복잡하게 얽혀 거래상대방 위험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패닉과 급격한 디레버리징 야기

리먼사태 이후 6개월만에 다우지수가 43% 급락하고 미국 등 주요국의 성장률이 단기간에 크게 축소

* '08.11분기 GDP(전기비, %): 미국 △2.3, 유로존 △1.7, 일본 △3.2, 한국 △1.6

그러나, G20 등 국제공조로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대응에 의해 위기 극복

- 현 상황은 국가부채의 부실규모와 보유주체가 대체로 알려져 거래상대방 위험은 낮은 편이지만

정치적 요인 등에 따라 정책대응이 지지부진하여 시장불안이 지속적으로 발생

현재의 위기가 유로존 메커니즘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당분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시장불안이 반복될 우려

③ (정책대응) 지금의 위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정책대응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 존재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선제적이고(preemptive) 충분하며(sufficient) 확실한(decisive) 정책대응을 통해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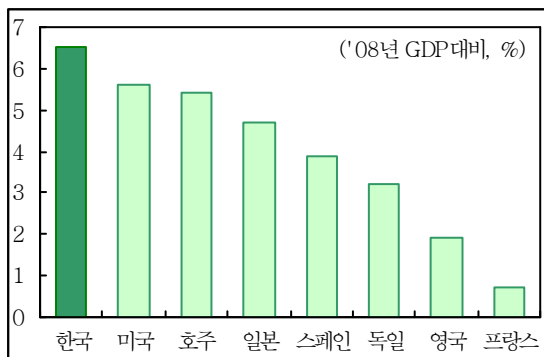
유가하락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낮고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확장적 거시정책이 위기극복에 효과적으로 작용

* 두바이유(S/B): '08.7) 131.3 (10) 67.7 (12) 10.5 ('09.3) 15.6 (6) 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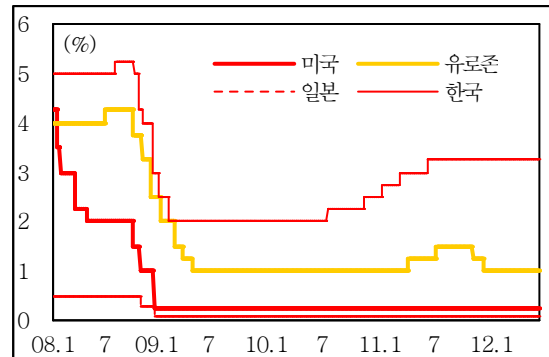
그러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대응이 국가채무 증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또 위기국면의 단초를 제공

* 국가채무/GDP('07→'11년, %): 미국 67.2→102.9, 일본 183.0→229.8, 그리스 105.1→160.8, 포르투갈 68.3→106.8, 아일랜드 21.8→105.0

주요국 재정책대 규모('08~'10년)



주요국 정책금리



- 지금의 위기상황은 대규모의 일시적인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응이 쉽지 않은 측면

재정여건 악화, 저금리 지속으로 대응여력이 제한적이고 유가 불안요인이 잠재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도 상존

◇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가 예상되므로 개별 불안요인에 대해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치밀한 준비를 하면서 긴 호흡으로 체질을 보강하는 등 체계적·구조적으로 대응할 필요

[참고 2]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재정부 KDI 공동으로 전문가(281명, 교수·기업인·연구원)와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6.1~22)

① (대내외 위험요인) 경제전문가들은 대외 위험요인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 대내 위험요인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를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선택(복수응답)

	대외 위험요인			대내 위험요인				
	국제금융 시장 불안	세계경제 성장둔화	중국경제 경착륙	수출증가세 둔화	수비누자능 내수둔화	대선능 불확실성	부동산시장 침체	가계부채 증가
전문가	74.0%	18.5%	7.1%	44.1%	35.6%	23.1%	20.3%	19.9%

② (하반기 중점과제) 일반국민은 「물가안정」, 전문가 「경제체질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물가안정	경제체질 강화	민생안정 · 복지확충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수출활력 제고	기업투자 활성화	미래변화 대비
일반국민	32.5%	9.2%	27.3%	14.7%	3.0%	3.2%	5.7%	4.4%
전문가	7.1%	25.3%	17.1%	13.5%	12.8%	11.7%	6.0%	5.7%

③ (기업활동과 투자활성화 과제)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중소기업·자영업 경쟁력 제고」를 핵심과제로 응답

	중소기업·자영업 경쟁력제고	보합리한규제 전폐	기업금융· 세제지원	유망서비스 산업육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국내U턴기업 지원강화
일반국민	49.5%	17.3%	10.2%	7.4%	8.6%	6.5%
전문가	45.9%	21.0%	12.8%	11.0%	3.9%	4.6%

④ (생활물가 안정)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유통구조 개선」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반국민은 「공공요금안정」과 「석유제품가격안정」, 전문가는 「거시적대응」과 「시장구조개선」을 응답

	유통구조 개선	금리·환율 등 거시적 대응	공공요금 안정	독과점시장 구조개선	농수산물 수급안정	석유제품 가격안정	서비스요금 안정화
일반국민	21.5%	9.5%	20.7%	6.8%	14.3%	18.8%	8.2%
전문가	42.0%	20.3%	8.5%	15.3%	5.7%	4.3%	3.9%

⑤ (일자리 창출 방안) 일반국민은 「기업투자 촉진」, 전문가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을 핵심과제로 응답

	신성장동력 발굴과 육성	기업투자 촉진	공공기관 채용규모 확대	직업훈련 활성화	정년장업 활성화
일반국민	19.0%	32.7%	20.2%	17.3%	10.1%
전문가	39.5%	23.1%	1.4%	3.6%	5.3%

Ⅲ.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 글로벌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체질 개선을 지속

①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하여 체계적·구조적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의 활력을 보완하기 위한 부문별 노력을 배가

- 비상점검체제와 상황별 대응계획을 통해 대외충격에 충실히 대비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재정건전성 확보 등 부문별 체질 강화 지속
-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월·불용 최소화 등으로 재정투자를 보장하여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여력 축소를 보완
- 중소기업·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 체질을 강화하여 민간투자의 활력을 제고
- 제2중동북과 신흥국 내수시장 확대를 활용하여 맞춤형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등 수출시장의 새로운 활로 개척
- 서비스업·녹색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구·기후 등 중장기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기반 확충

② 대외여건 악화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물가·일자리 등 민생안정에 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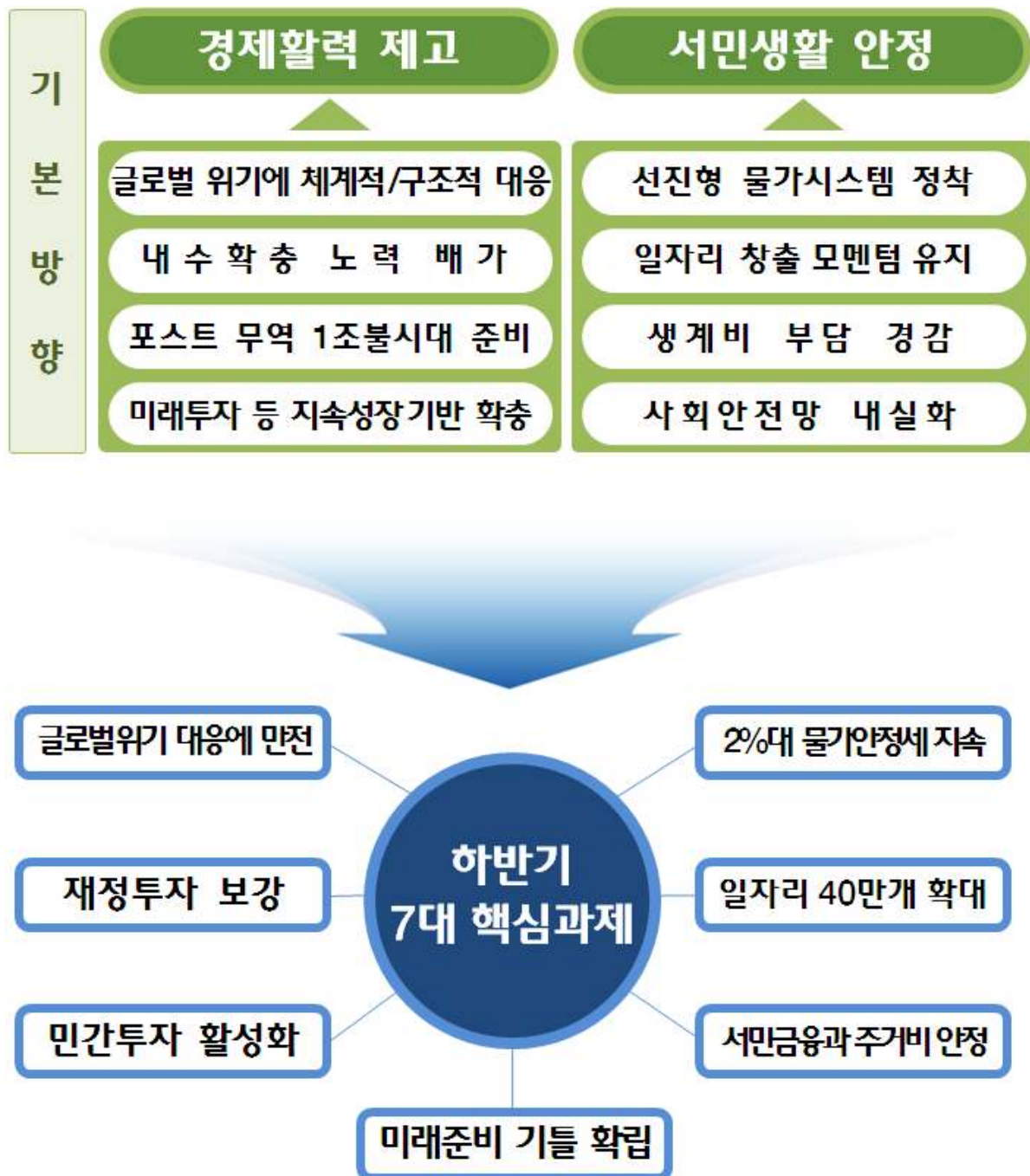
- 수급차질 등 단기적 물가불안 요인에 대응하면서 유통구조 개선 등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을 위한 구조적 노력 강화
- 청년층·베이비부머 등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세제 등 주요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보완
-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주택거래·임차 등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계의 생계비부담 완화
- 필요한 대상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내실화

※ 위기대응·경제활력·민생안정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민간·정치권·정부·자치단체 등의 공동노력 강화

IV. 하반기 7대 핵심 추진과제

◇ 앞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 특히 역점을 둘 7대 핵심과제에 정책 역량을 결집



1. 글로벌 위기, 체계적·구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비상대응체계 강화) 글로벌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하여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체계적 대응을 강화
 - 기존 상시점검체제를 집중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고 현행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갱신
 - ※ 대외충격에 따른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대내외 위험요인 점검과 위기대응 역량 결집을 위해 매월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운영
 - ※ 민간전문가, 대·중소기업 등 경제계, 자치단체장 대표 등 참여
 -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차관급) 등을 거시경제금융회의로 통합·개편하여 정기적으로 거시건전성 점검
 - 조기경보시스템을 주요 거시경제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는 등 운영체계 개선
- (경제체질 개선) 가계부채 구조 개선, 재정건전성 확보,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 등 위기에방을 위한 구조적 노력 지속
 - 건전소비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 개편
 - ※ 공제율(신용 20%, 직불 30%)·공제한도(합계 300만원) 조정 등
 -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를 법제화하고 주택금융공사에 한은·정부 출자(12~13년)
 - 의무·재량지출 구분 관리, 재정·조세지출 활용기준 마련,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조세지출 포함 등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위험요인 점검·대응시스템 구축
 - 지방세 신규감면(1.2조원 요청) 원칙적 불허, 재정투융자심사대상 확대, 지방공기업 설립검토절차 강화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제도와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금융시스템 경쟁력 강화

2. 재정투자, 증액(4조원)과 집행률 제고(4.5조원)로 보강하겠습니다.

- (기금계획 변경)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기금을 2.3조원 수준 증액
 - (서민생활 안정)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 활성화, 비축지원 확대
 - * 주택구입·전세자금사업(1.23조원), 농산물비축지원사업(622억원)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과 보증연계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충
 - * 중소기업창업자금(1,600억원), 소상공인정책자금(1800억원) 등
 -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보증규모*를 대폭 확대
 - * 6.2조원 규모(신보 2.1조원, 기보 1.1조원, 무보 3.0조원)
 - (서비스산업 육성)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육·문화예술분야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 관광숙박시설 용자지원(325억원), 인천아시아경기지원(300억원) 등
- (공공투자 확대) 경기보완효과가 큰 SOC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민간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7조원 수준 확대
 - 혁신도시 조기 추진, 발전시설 보강, 댐 건설 등 공공기관 투자를 1.1조원 수준 확대(68.5→69.6조원)
 - 진도율 등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민간투자 조기착공을 유도* 하고 인센티브 요율을 높여(5→최대 6%) 민간 선투자 활성화
 - * 6.3→6.9조원, 도로·철도 등 BTO(3,552억원), 관사 등 BTL(2,506억원)
- (이월·불용 최소화) 집행률을 예년 평균보다 1.6%p 높여 (95.1→96.7%) 집행금액을 최대한 확대(약 1.5조원 수준)
 -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점검체계(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하반기 이월·불용 최소화 점검체제로 조기 전환하고 현장관리 강화

3. 민간투자, 설비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외국인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투자 제약요인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정비하여 투자 촉진
 - 산은·기은 등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3조원 규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투자와 대출방식으로 병행 지원
 - * 설비투자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가 출자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을 한시 연장('13년말까지)하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의 실효성·탄력성 제고*
 - * 예산편성방식 개편, 현금지원 하한선 폐지 등
 - 해외사례를 연구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외국인투자 지원체계 개선('12.8월)
- (건설산업 체질 강화) 건설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건설사업 건전성을 제고
 - PF 정상화뱅크 확충*, 리츠 세제지원**, 건설사 상생협력펀드 확대('11년 992→'12년 1,942억원) 등을 통해 건설사 경영정상화 도모
 - * 2조원 규모의 은행권 PF채권을 추가 매입하여 PF정상화 유도
 - **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 공제(50%) 일몰 연장('12년말→'15년말)
 - P CBO를 발행(3조원)하고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재시행을 추진하여 중소건설사의 자금난 완화
 - 부실시행사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시행권 취소를 가능하게 하고 건전한 부동산 개발을 유도하는 부동산 사업평가체계 도입
- (신흥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신흥국의 확대되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진출전략으로 새로운 수출활로 개척
 - 對中 진출·경제협력 등을 촉진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추진전략 강구('12.3/4분기)
 - 수은의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하고 무역보험기금 사업비를 증액(500억원)하여 중동 등 신흥시장 수출금융지원 강화
 - * 무역보험 지원규모(조원): ('11년) 190 → ('12년) 200

4. 2%대 물가,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으로 달성하겠습니다.

- (석유제품 가격 안정)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활성화, 공급선 다변화 등 석유산업 경쟁촉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
 -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서울지역 25개 포함, 총 1,000개 설립
 - * 알뜰주유소 현황(6.25일 기준): 서울 6개, 총 565개
 - 민관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계약 변경 유도
 - '12.7월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 할당관세 적용, 석유 수입부과금(16원/ℓ) 환급, 제5공급자 참여 등 공급선 다변화
- (식료품 가격 안정) 관측 강화, 계약재배^{***}·국산비축 확대, 탄력적 할당관세 운용과 적기수입 등 농산물가격의 구조적 안정시스템 정착
 - * 관측확대: 양식업→연근해 수산물('12.6월), 국내곡물→밀·옥수수 등 국제곡물('12.7월)
 - ** 계약재배물량(총생산량 대비, %): ('12년) 20 → ('13년) 30
 -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설탕 직수입과 대형 유통업체 공급, 할당관세 적용, 사카린 규제 완화 등 지속
 - * 설탕 할당관세 물량: ('12.1~6월) 10만톤 → ('12.7~'13.6월) 30만톤
- (물가인프라 개선)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추이, 국내외 가격차, FTA 효과 등을 중점 분석하여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12.9~'12월)
 - * (유형 예시) ① 가격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 ② 국내판매가격이 외국보다 높게 형성된 품목, ③ FTA 관세인하 효과가 미흡한 품목 등
 - '13년 이후의 중기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 결정,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주기 단축(5→2~3년) 등 제도개선 병행

5. 일자리, 40만개까지 늘리고 고용유인형 세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열린 고용사회 구축 등 청년 내일 만들기) 군 복무가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확충
 - 기술습득 재복무 취업이 연계되도록 군 특성화고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기술병 선발시 특성화고 졸업생 등 우대
 - 전역 1~2개월전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역후 직업 훈련·알선을 통해 취업 탐색비용과 시간 단축
 - 해외건설 실무학기제 도입 등 청년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실패시 상환금을 감면하는 융자상환 조정형 청년창업자금 확대(500→700억원)
 - '12년 공공기관 채용규모(13.8→15.3천명)와 고졸 채용규모(2.2→2.5천명)를 추가 확대
 - 고졸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12.7월)하고 고졸사원 대학 지원제도(학비지원 등)를 체계화('12.1/1분기)
 -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취업성공패키지 II)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장년층(최저생계비 200→250% 이하)과 청년층*의 참여범위 확대
 - * 청년층 참여기준: (현행) 졸업후 6개월 → (개편) 졸업학기 종료후 6개월
- (베이비부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은퇴후 생활 안정과 함께 경력·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 실업급여 연령제한(65세)을 완화하고 시니어 비즈플라자 지원을 확대하여 퇴직자 구직활동과 경력을 활용한 창업 지원
 - 직업훈련·취업알선 지원대상 전직희망 자영업자 범위 확대*
 - * (현행) 연매출 8천만원 미만(직업훈련·취업알선·취업성공수당 지원) → (개편) 연매출 8천만원~1.5억원 추가(직업훈련·취업알선 지원)
- (고용유인형 세제 강화) 기업의 고용유인을 강화하고 구인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제 보완
 - 고용창출 효과가 제고되도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편
 -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가 군 입대 후 복직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도입
 - 청년층의 해운인력('20년까지 6,000명 부족)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해선원의 소득세 비과세(현행 월 200만원) 확대

6. 가계부담, 서민금융과 주거비 안정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 (서민금융 활성화) 서민의 금융회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고금리 부담을 완화
 - 한국은행 등과 협조하여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 다양한 금리대의 대출상품이 출시되도록 저축은행과 은행의 연계영업을 허용
 -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의 법적근거 마련,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에 의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대출 금리인하 유도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대부업법 개정 재추진
 -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단속을 지속하되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하여 금융소외자를 두텁게 보호
 - * 서민금융제도 지원요건을 일정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바뀌드림론의 지원대상을 확대
 - 미소금융을 통해 학자금 전환대출·긴급 생활자금대출 지원
- (주거비 부담 경감) 실수요자와 서민의 보금자리 마련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주거 지원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 취득세 감면 일몰('12년말) 연장 등 주택구입 부담 완화
 -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 임대료의 소득공제(현행 10%)를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일정요건 하에 임차인에게 보증 지원(주금공)
 -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체계 등 주택 정책 점검·보완
 - * (예) 다세대·다가구 주택자금 융자지원시 규모에 따라 이자율 차등 등 검토

7. 미래준비, 서비스산업·녹색성장 등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 (서비스산업·녹색성장 기반 공고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녹색성장이 가속화되도록 제도기반을 꾸준히 정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제조업·서비스산업간 차별사례를 발굴하여 개선('12.3/4분기)
 - 복수비자제도 개선*, 중국어가이드 확충 등 중국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호텔 건립규제 개선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 유도
 - * 복수사증 발급대상과 유효기간(3→5년) 확대, 환승승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제도 도입 등
 -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점검·조정하고 미달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 제고
 -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을 제정('12.11월)하여 배출권 할당 기준, 무상할당비율 등 배출권거래제 세부사항 설계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제감면 일몰('12년말) 연장, 온실가스감축시설 투자 세액공제(10%) 허용 등 세제지원 강화
- (미래대응 인프라 확충) 인구 등 구조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중장기 정책대응 기반 조성
 - 퇴직연금 세제 개편*,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세제혜택 일몰('12년말) 연장 추진 등 고령화 진전에 대비
 - * (예) 현재 600만원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조정 등
 - ** (현행) 주택소유자·배우자 모두 60세 이상→(개편)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은행과 비거주자의 외화예금 확보·국내예치 유인을 강화* 하여 안정적인 외화조달기반 조성
 - * 외화예금 유치 우수은행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이 경감되도록 설계,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등
 -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비하여 다양한 국채시장 안정방안* 강구('12.下 용역 실시)
 - * 시장안정용 펀드 조성, 공공부문 직매입 기능 확대, 국제협력단계 강화 등
 -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사회통합 등 미래 핵심정책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12.9월 중장기보고서 발간)

< 붙임 1 >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과제 세부내용

순서

I. 경제활력 제고 24

1. 글로벌 위기에 체계적·구조적 대응
2. 내수확충 노력 배가
3. 포스트 무역 1조불시대 준비
4. 미래투자 등 지속성장기반 확충

II. 서민생활 안정 43

1.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
2. 일자리 창출 모멘텀 유지
3. 생계비 부담 경감
4. 사회안전망 내실화

1. 경제활력 제고

- ◇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만반의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부문별 체질 개선 등 구조적 위기대응노력 강화
 - 내수부문의 활력을 보완하고 수출환경 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성장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 ◇ 지속가능한 내수성장기반 확충, 미래 구조변화 대비 등 중장기·구조적 관점에서의 정책대응도 강화

1. 글로벌 위기에 체계적·구조적 대응

- (거시정책)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 재정은 ‘13년도 균형기조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고용·경기회복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적 노력 강화
 - 유동성은 물가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대외 변수와 국내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 (비상대응체계 강화) 글로벌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하여 거시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확립
 - 기존 상시점검체제를 집중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
 - 현행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갱신하고 필요시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 ※ 대외충격에 따른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대내외 위험요인 점검과 위기대응 역량 결집을 위해 매월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운영

※ 민간전문가, 대·중소기업 등 경제계, 자치단체장 대표 등 참여

-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차관급) 등을 거시경제금융회의로 통합·개편*하여 정기적으로 거시건전성 점검

※ (현행) 대내외 긴급상황 발생시 거시건전성 점검 기능 수행
 ※ (개선) 정기적인 거시건전성 점검 기능 보강

- 조기경보시스템을 주요 거시경제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

- (전력수급 안정) 충분한 예비전력 유지를 위해 전력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조업조정 등 수요관리 노력 강화

- 발전소 불시 고장을 최소화*하고 민간보유 자가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하여 공급능력 확대

※ 취약설비 사전점검과 간이정비 활성화, 발전소별 책임운영제 실시 등

- 피크수요 감축을 위한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고 업체간 휴가 분산·피크시간대 조업조정 참여 유도

- 최근 전력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적정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26년) 수립

- (원유수급 안정) 이란산 원유에 대한 대체유종 확보 등을 통해 국내 원유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 장기대체물량 추가확보, 현물구매 확대, 석유수급 점검체계 강화 등

-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에 따른 對이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 수출자율관리(무역협회), 수출선전환 지원 등

- (가계부채 연착륙)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에 비해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을 유도
 - 일자리 창출 등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고 건전소비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 개편
 - ※ 공제율(신용 20%, 직불 30%) · 공제한도(합계 300만원) 조정 등
 - 은행의 장기 · 고정금리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를 법제화하고 주택금융공사에 한은 · 정부 출자(12~13년)
 - ※ 커버드본드를 발행하여 장기 · 고정금리 자금을 조달하거나 한은 · 정부의 출자를 받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 ·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화
 - 소득 · 연령별 상환능력, 자영업자 · 다중채무자 대출 등 가계 부채구조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취약부문 세부점검 강화
 - 상호금융 · 보험사 대손충당금 적립과 고위험 대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월)을 차질없이 추진
- (서민금융 활성화) 서민들이 고금리의 사금융보다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반 조성
 - 한국은행 등과 협조하여 저신용 · 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 다양한 금리대의 대출상품이 출시되도록 저축은행과 은행의 연계영업을 허용
 - 대출모집인 관리 · 감독의 법적근거 마련,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에 의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대출 금리인하 유도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대부업법 개정 재추진
 -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단속을 지속하되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하여 금융소외자를 두텁게 보호
 - ※ 서민금융제도 지원요건을 일정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바뀐 드림론의 지원대상을 확대
 - 미소금융을 통해 학자금 전환대출 · 긴급 생활자금대출 지원

- (기업자금 선순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면서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병행
 - 부실기업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채권은행 중심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
 - 신·기보의 장기·고액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여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유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신보가 보증과 직접투자를 병행 지원(100억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
- (금융제도 보완·개선) 금융제도를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과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정비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
 -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제도와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금융시스템 경쟁력 강화
 - 저축은행 부실위험 예방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보완하고 바젤Ⅲ 시행에 대비하여 은행의 자본규제체계 정비
 - 금감원 한은 예보간 정보공유 활성화로 유관기관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감독의 효율성 제고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별 체계로 전환
- (국채시장 안정) 국채시장을 선진화하고 내수기반을 확대 하는 등 시장 대응능력을 강화
 -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비하여 다양한 국채시장 안정방안* 장구(12.下 용역 실시)
 - ※ 시장안정용 펀드 조성, 공공부문 직매입 기능 확대, 국제협력단계 강화 등
 - 차환용 국고채 발행규모를 늘리고 국채발행한도 변경방안을 검토하여 국채시장 저변 확대
 - 국고채 30년물을 차질없이 발행(12.9월)하여 국채만기 구조를 선진화하고 초장기물 금융상품에 대한 지표금리 제공

- (자본유출입 대응)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간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
 - 「한중일 국제투자 framework」을 구체화하고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유사 협력체제 구축
 -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제도의 시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 ※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 조정 등
- (외화예금 확충) 시장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전략을 추진하되 외화예금 우수은행에 대한 유인 확대와 비거주자 외화예금 확보에 역점
 - 외화예금 유치 우수은행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이 경감되도록 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 외환건전성부담금 적립금과 공공기관의 여유 외화자금 중 일부를 외화예금 분야의 우수·선도은행에 예치
 - 외화차입과 동등하게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 성과평가지표(KPI) 반영과 영업망 확대 등 현지화 제고를 통해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수신 확대를 유도
- (재정총량관리 강화) 세입확충·지출구조조정으로 '13년 관리대상 수지 균형을 회복하고 '1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30% 미만 유지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을 의무·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차별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지출증가율을 적정수준 관리
 - 조세감면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방안*을 마련('12. 1)하여 비과세 감면 정비에 활용
 - ※ (예)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조세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
 - 재정-조세 지출간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예산편성 등에 적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 지원대상의 성격·범위, 전달체계의 효율성 등을 고려

□ (재정위험 관리 강화) 국가부채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재정위험의 대상·수준, 위험예측 모니터링 지표, 위기경보지수(fiscal stress index) 등 위기 예측을 위한 모형 개발

○ 4대연금 등 10개 분야*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센터(조세·인)를 통해 컨설팅·실무교육 등 지원('12.10)

※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기초노령), 의료(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고용보험, 산재보험), 교육 등

□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지방재정의 사전 위기관리 기능을 내실화하고 지방공기업·투융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행안부의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대상을 확대(사업비 300→200억원 이상)하고 재정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심사의 전문성 제고

○ 지방공기업 남설 방지를 위해 사전협의제 도입 검토 등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절차 강화('12.10)

○ 지방세 신규 감면(약 1.2조원 요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금년 일몰도래 감면액(약 2.9조원) 중 30~50% 수준 정비*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몰규정을 철저히 준수, 조례를 통한 감면 신설시 동 규모만큼 보통교부세 감액

○ 중앙정부에서의 지방채 인수물량을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재정운용 책임성 제고

□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공기업 부채규모와 증가속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 유도

○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41개)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사업 구조조정, 원가절감 등)을 수립하여 국회제출('12.10.2일까지)

2. 내수확충 노력 배가

- (재정투자 보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공공투자 증액(4조원)과 재정집행을 제고(4.5조원) 등 재정투자 보장
 - (기금계획 변경)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비스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기금을 2.3조원 수준 증액
 - (서민생활 안정)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 활성화, 비축지원 확대
 - * 주택구입·전세자금사업(1.23조원), 농산물비축지원사업(1622억원)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과 보증연계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충
 - * 중소기업창업자금(1,600억원), 소상공인정책자금(800억원) 등
 -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보증규모*를 대폭 확대
 - * 6.2조원 규모(신보 2.1조원, 기보 1.1조원, 무보 3.0조원)
 - (서비스산업 육성)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육·문화예술분야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 관광숙박시설 용자지원(325억원), 인천아시아경기지원(1300억원) 등
 - (공공투자 확대) 경기보완효과가 큰 SOC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민간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7조원 수준 확대
 - 혁신도시 조기 추진, 발전시설 보장, 댐 건설 등 공공기관 투자를 1.1조원 수준 확대(68.5→69.6조원)
 - 진도율 등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민간투자 조기착공을 유도* 하고 인센티브 요율을 높여(5→최대 6%) 민간 선투자 활성화
 - * 6.3→6.9조원, 도로·철도 등 BTO(3,552억원), 관사 등 BTL(2,506억원)
 - (이월·불용 최소화) 집행률을 예년 평균보다 1.6%p 높여(95.1→96.7%) 집행금액을 최대한 확대(약 1.5조원 수준)
 -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점검체계(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하반기 이월·불용 최소화 점검체계로 조기 전환하고 현장관리 강화

□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의 투자 애로요인을 타겟팅하여 자금조달, 입지여건 개선 등 투자지원 강화

○ 산은·기은 등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3조원 규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투자와 대출방식으로 병행 지원

※ 설비투자펀드 구성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가 출자

○ 입지기능 개선을 위해 노후산단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투자방식 클라우드 펀딩 도입방안을 구체화하여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

○ 해외진출 기업의 U턴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U턴기업 지원법 제정 등 지원체계 구축 완료('12.12월)

○ 연대보증제도 개선,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 신설 등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 수립('12.7월)

※ (예) 중소기업 졸업시 부담이 커지는 1(0)여개의 제도 중 졸업기업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하도급·세제·금융제도 등

□ (외국인투자 유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인센티브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지속

○ 해외사례를 연구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외국인투자 지원체계 개선('12.8월)

○ 예산편성방식 개편*, 현금지원 하한선 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의 실효성과 탄력성 제고

※ (현행) 불확실한 사전예측에 따른 예산편성(실제소요 대비 예산부족 소지) → (개편) 투자계획 확정시 차년도 예산에 반영·지원(적정예산 확보)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13년말까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실효성과 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도 병행

- 일본기업의 수요가 큰 지역에 부품소재분야 등의 일본기업 전용공단 지정
- 외국인의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전심사제 도입방안 마련('12.9월)

□ (건설산업 체질 강화) 건설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건설 사업 건전성을 제고

- 신용위험평가 결과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건설사는 만기연장 등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적극 유도
-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간 분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 점검강화 등 워크아웃 건설사의 원활한 회생 유도
- PF 정상화뱅크 확충*, 리츠 세제지원**, 건설사 상생협력펀드 확대('11년 992→'12년 1,912억원) 등을 통해 건설사 경영정상화 도모
 - * 2조원 규모의 은행권 PF채권을 추가 매입하여 PF정상화 유도
 - **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 공제(50%) 일몰 연장('12년말→'15년말)
- P-CBO를 발행(3조원)하고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재시행을 추진하여 중소건설사의 자금난 완화
 - * 공사 계약일부터 공사대금 수령시까지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한 대출에 대해 신보가 보증 제공(국회 협의회 후 시행)
- 부실시행사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시행권 취소를 가능*하게 하고 건전한 부동산 개발을 유도하는 부동산 사업평가체계 도입***
 - * 1.부도, 2.토지소유권 이전(경매·공매 등), 3.2년 이상 공사중단시(주택법 개정)
 - **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규모 등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수익성 등을 평가하여 결과를 공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 결정시 활용
- 부동산개발, 설비투자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
- 최저가낙찰제 공사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 전액반영,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공사비 과다삭감 관행개선 등 적정 공사비 확보

- (기업환경 개선) 현장애로와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 법령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 중복적 표준·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표준·인증 선진화 방안 마련
 - * (예) LED전구의 KS·KC인증 중복시험 요소 제거 등
 - 영업용 택배차량 부족으로 인한 자가용 차량 운행문제 해결을 위해 자가용 택배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
- (중국관광객 유치) 사증제도 개선 등 입국·소비편의를 제고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중국관광객의 한국방문 활성화
 - 복수사증 발급대상¹⁾·유효기간(3→5년)을 확대하고 환승승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제도 도입
 - * 의료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일정규모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등
 - 위안화 수수료와 은련직불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 사후환급 창구(현재 달러화·엔화만 환급)의 위안화 환급 추진
 - 중국어 관광가이드 시험주기를 단축(연 1→2회)하고 표준 계약서 제정(12.8월) 등 처우를 개선하여 관광전문인력 양성
 - 소형호텔업 허용(20~30실규모), 용적률 완화, 호텔 건립규제 개선^{*} 등 원활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유도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¹⁾내 호텔건립 절차 개선 등

3. 포스트 무역 1조불시대 준비

- (FTA 네트워크 구축) 수출시장 선점을 위해 FTA 체결을 확대 하되 대외 협상력 · 국내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협상시기 결정
 - 한 중 FTA는 1단계 협상을 통해 민감품목에 대한 다양한 보호방식을 마련한 후 2단계 양허협상 진행
 - 한-일 FTA는 실무협의를 거쳐 협상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한 중 일 FTA는 연내 협상개시를 목표로 실무협의 · 국내절차 추진
- (FTA 활용기반 강화) FTA를 활용한 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FTA 체감도 제고에 주력
 - EU · 미국을 중심으로 통합무역 정보서비스를 확충하고 컨설팅 제공 등을 위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원산지 판정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간편판정 FTA PASS'를 개발 · 보급하고 기업간 원산지 증빙서류 유통인프라 구축
 - ※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사전 확인해 주는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산지관리사 양성 확대
 - 미국 대형 유통기업 매장에 한국 중소기업 제품전시관을 개설('12.9월)하여 국산 유망 소비재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 주요 FTA 수입물품의 수입 ·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FTA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
- (FTA 취약부문 경쟁력 제고)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수산업, 중소제조업 등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농식품 모태펀드 확대 · Golden Seed 프로젝트*를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R&D 투자 확대
 - ※ 벼, 감자, 배추, 무, 돼지, 닭, 넙치, 전복 등 20개 이상 수출 전략종자 개발
 - 한-중 FTA 협상진행 경과에 따라 분야별 쟁점, 산업별 영향 등을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보완대책 검토

□ (신흥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신흥국의 확대되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진출전략으로 새로운 수출활로 개척

○ 對中·진출·경제협력 등을 촉진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추진전략 강구(‘12.3/4분기)

※ (예) 인터넷 등 온라인 시장진출 지원, 의료·문화콘텐츠·유통·물류 등 서비스산업 현지진출 기반 강화, 녹색·신성장산업 협력 강화 등

○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이미 진출한 국내 유통기업을 활용한 내수시장 진출 지원

※ 대형유통기업의 중국 현지매장에서 한국 중소기업 상품전 개최, 주요 유통 채널별 입점지원사업 개최, 상담회 진행 등

○ 미얀마(경제개방)·러시아(WTO 가입)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흥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수립

□ (제2중동붐 확산) 중동진출을 위한 자금·인력 지원 등을 강화하여 제2중동붐에 따른 중동시장 확대를 적극 활용

○ 한 중동 플랜트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금융기관 대출자금 단기상환제를 도입하여 중동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중동지역에 해외인턴 우선 배정, 정보제공 종합포털 구축, K Plaza 설치 등 다각적인 중동진출 지원

○ 중동국가와 인프라 민관합동 T/F를 본격 운영하고 글로벌 인프라 펀드와 중동 국부펀드간 MOU를 확대하여 제3국 공동진출 지원

※ 우리의 인프라 건설·운영 경험과 중동국가의 풍부한 자금을 결합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공동투자 방안 논의, 구체적 프로젝트 발굴

□ (수출금융 개선)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수출금융·무역보증을 확대하여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과 해외진출 지원

○ 대규모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수은의 신용공여한도를 완화(수은법시행령 개정)

○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주요 정책금융기관간 금융지원 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 신흥시장 진출의 위험부담 완화와 수출 다변화를 위해 무역보험기금 사업비를 증액(500억원)하여 무역보험 지원 확대

※ 무역보험 지원규모(조원): (‘11년) 190 → (‘12년) 200

4. 미래투자 등 지속성장기반 확충

- (서비스산업 선진화) 인프라 구축, 해외진출 지원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 기반을 꾸준히 정비하고 업종별 제도개선 추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재정·금융·세제·인력 등 제반영역에서 제조업·서비스 산업간 차별사례를 발굴하여 개선(12.3/4분기)
 - 의료·교육 등 개별 서비스 분야의 IT 활용을 촉진하고 유망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12.7월)
 -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을 위해 전문자격사 수급 여건을 점검하고 독자적 업무영역의 개방을 추진
 - 관광레저 비행로 지정(12년말), 수상레저 체험장 설치*, 낚시 정보 종합포털 구축(12년말) 등으로 여가산업 활성화 뒷받침
 - * 4대강 주변에 요트·카누 등 수상레저 체험장 2개소 설치(12.11)
 - 해외환자 유치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의료법 개정)
 - *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해외환자 의료사고 배상 공제회 설치 등
 -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를 차질없이 시행(12.11월)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

□ (녹색성장 가시화) 배출권거래제 시행('15년) · 온실가스 감축 목표('20년 BAU대비 30% 감축) 이행 준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

-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을 제정('12.11월)하여 배출권 할당 기준, 무상할당비율 등 배출권거래제 세부사항 설계
-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점검 · 조정하고 미달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 제고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일몰('12년말) 연장
- 온실가스감축시설 투자에 대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
- 새로운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현행 기후 변화 적응대책을 수정 · 보완

□ (신성장동력 확충) 지난 4년간의 신성장동력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 ·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추진전략 수립

- 클라우드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법* 제정
 - * 국내 클라우드 업체의 R&D · 창업 · 인력양성 등 지원, 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중단 등에 대한 보호장치 등 규정
- 소프트웨어 기업이 적정 유지관리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
 - * 서비스 유형 · 업무중요도 등 각종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적정예산 편성
 - ** 현행 1종인 계약서를 SW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공정한 계약체결 유도
- 콘텐츠를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 · 보증을 수행하는 콘텐츠 공제 조합을 설립하여 영세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R&D 투자 역량 강화) 미래과학기술 트렌드와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R&D 과정에 집단지성 등 외부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열린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
 - 기초연구 분야 국가 R&D사업에 **성실실패 제도*** 도입('12.7월)
 - ※ 연구 수행 결과를 평가한 결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성실히 연구한 사실이 인정되면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면제
- (평생교육 기반 강화) 선취업 후진학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
 - 사내대학 활성화, 후진학 선도대학·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 선취업 후진학 생태계 조성
 - ※ 후진학 선도대학: ('12)10→('13)20교, 재직자 특별전형: ('12)23→('13)50교
 - 대학의 이러닝 지원센터 확대, 대학간 강의공개를 통한 학점 연계 등 스마트 교육기반 강화
- (미래대응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사회통합 등 미래 핵심정책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12.9월 중장기보고서 발간)
 -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운영하여 특정테마¹⁾와 관련된 정책 대응 방안을 연계 논의하고 범부처·민간전문가간 의견교환 활성화
 - ※ 한국기업 생태계의 미래(7월말), 한국 사회의 미래(8월말), 지구의 미래·기술의 미래(9월말)
- (미래지향형 조세체계 구축) 경제여건과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조세체계를 개편하고 지하경제 축소 노력
 - 소득원천간·금융상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여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선
 - ※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지원 필요 분야에 대한 선별적 세제지원, 금융세제 단순화

- 고령화 진전에 대비하여 퇴직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유인 개편

* (예) 현재 600만원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조정 등

- 고소득 자영업자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원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

□ (보육지원 내실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보육·가정양육간 균형 있는 지원체계 정립

- 영아(0~2세)의 경우 가정양육-시설보육간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보육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T/F(총리실)」를 통해 집행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논의·조기확정

- 실수요층의 어린이집 이용확대를 위해 입소 우선순위기준을 법제화하고 비정규직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맞벌이 인정서류* 추가

* (현행) 재직증명서, 1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 (개선) 위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추가로 인정

-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추가 지정(12.11 100개소)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

- 직장어린이집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설치의무 미이행 기업의 명단을 공표(12.12월)하여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

* (현행) 사업장 인근 설치, 정원의 1/3 이상을 사업장 근로자 자녀 충원 등

-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시행(12.11)

□ (노후소득 보장체계 정비) 고령화 진전에 대비하여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사적연금 활성화 등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상품 운용비중이 축소되도록 제도 개선**

* 현재 금지된 1X·II형의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를 적립금의 40%까지 허용

** 자사상품 편입 비중 한도 축소(70→50%), 사업자가 자사상품이 포함되지 않은 적립금 운용방식을 1개 이상 제시하도록 유도

○ 베이비부머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노후생활 안정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 (현행) 주택소유자·배우자 모두 60세 이상 → (개편)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재산세 감면(25%) 혜택의 일몰(‘12년말) 연장 추진

○ 재정부·복지부·고용부·금융위로 구성된 노후소득보장체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퇴직·개인연금 등 제도 개선

□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 1~2인 가구 증가, 임차수요 증가 등 구조변화에 부응하여 맞춤형 주거 지원

○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체계 등 주택 정책 점검·보완

* (예) 다세대·다가구 주택자금 융자지원시 규모에 따라 이자율 차등 등 검토

○ 보금자리지구내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등 ‘12년 보금자리(전체 15만호) 임대주택 9.5만호 공급

○ 민간사업자가 BTL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

*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12년중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 전문임대주택관리업을 신설·육성하고 토지임대부 임대 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유도

□ (자원의 안정적 확보) 곡물의 안정적 해외조달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지속 추진

○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을 마련('12.8월)하고 지분참여·M&A를 통해 수출·산지 엘리베이터 등 해외곡물유통망 확보

○ 연기금 투자 유치, 펀드조성 확대 등을 통해 해외자원 개발에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성공불 용자제도 개선도 병행

※ 실패시 감면을 인하, 성공시 특별부담금 요율 인상 등

○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폐기물 거래소(가칭)」 구축*

※ 폐기물거래소 운영을 위한 정보처리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마련('12.11)

□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동반성장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

○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 대기업 지분도·주식소유·채무보증(7월), 내부거래(8월), 지배구조(9월), 지주회사(10월) 현황 등을 순차적으로 분석·공개

○ 업종별 세분화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미비점을 보완('12.11)하여 공정거래협약을 전방위적으로 확산

※ (현재) 제조업, 유통업 → (세분화)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정보서비스업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모범거래기준을 피자·치킨·커피전문점('12.3/4분기), 편의점('12.4/4분기) 업종까지 확대 마련

※ 상반기중에는 제빵 업종에 대해 기 마련('12.1월)

□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 선진화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착근에 주력하면서 자율책임경영체계 등 정착 유도

○ 공기업 선진화 잔여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시장여건 변화 등으로 지연된 과제는 대내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방향 검토

※ 민영화 등 자산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추진력 강화

-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공공기관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 마련(12.8월)
- 경영자율권을 확대하고 내부건제장치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정착·내실화
- (해외 M&A 활성화) 공공부문의 해외 M&A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금융지원 등 병행
 - 연기금의 해외 M&A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부품·소재 기업 인수 등을 위한 펀드 설립
 - SPC(투자목적회사)의 차입·보증규모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대출·보증, 컨설팅비용 지원 등 확대
- (글로벌 위상 강화) G20, RIO-20 등 글로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개발원조사업 선진화
 - IMF 재원확충 참여(150억불)·이사직 수임(11월), WB 동아태 금융자문센터 설치 등 국제기구내 역할 강화
 - 녹색기후기금(GCF) 유치(11월 선정)를 위해 GCF 포럼·이사회(10월, 송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 EDCF 최초의 민관협력사업(라오스 수력발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추가 사업 발굴
 - EDCF 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신재생 에너지·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EDCF 보증 시범사업 발굴
- (통계인프라 개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계 개발·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업 관련 통계 재정비(12.7), 사회지표 체계 개편(12.12월) 등을 차질없이 추진
 - OECD 등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통계에 대해 사전·사후적 관리 강화 방안 마련

II. 서민생활 안정

- ◇ 물가·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여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서민생활 영향을 최소화
- ◇ 교육·주거·의료 등 분야별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내실화 노력을 지속하여 서민의 삶의 질 제고

1.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

- (공공요금 안정) 공기업의 원가 절감과 요금체제 개편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
 - 전기요금에 계시별 요금제를 강화하고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도시가스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일반용까지 확대
 - 지역난방사업자간 전략적 제휴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영효율을 유도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12.9월) 원가절감 반영폭 확대
 - 시내버스·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경영효율화와 요금관리방안 강구(행안부·재정부 공동연구용역)
-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관측제도를 확대하여 수급불안 소지에 선제 대응하고 실제 수급불안 발생시 수급조절기능 강화
 - 농축산물 관측대상을 연근해수산물('12.6)·해외곡물('12.7)로 확대하고 일부 채소류에 대해 시범적으로 가격을 보장하는 방안* 검토
 - ※ 가격 변동성이 큰 채소류에 대해 평균 기준가격 설정후 급락시 보상
 - 배추·고추 등에 대한 국산비축을 확대하고 다년계약제 도입·산지작업반 운영 등을 통해 계약재배물량* 확대
 - ※ 계약재배물량(총생산량 대비, %): ('11) 11.7 → ('12) 20 → ('13) 30

□ (석유제품 가격안정) 석유시장 경쟁촉진 대책(1.19)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 '12.7월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 할당관세 적용, 석유 수입부과금(16원/ℓ) 환급, 제5공급자 참여 등 공급선 다변화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종목 축소(207→131개), 거래 편의성 제고* 등 보완방안 마련

* (예) 거래소에서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고 온라인입력 대행 등

○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금지(석대법시행령 '12.7월 개정)하고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해 소득·법인세 등 일시(2년간) 감면

* '12년 목표 상향: 700→1,000개(서울지역 25개 포함)

□ (개인서비스 요금안정) 업소·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경쟁촉진을 통한 요금안정 유도

○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지원('12년 1000억원)과 함께 각 부처의 공모사업 선정시 우대

○ 착한 가격업소가 낮은 요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 요금 감면·이차보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옥외가격표시제 시범사업('12.1~6월) 결과를 분석하여 세부 시행방안을 보완하고 홍보·제도활동 실시('13년 의무시행)

□ (통신요금 인하)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이용자의 통신비부담 절감

○ 기초수급자에 대한 스마트폰 요금감면체계를 개선('12.12월) 하여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 확대

○ MVNO 활성화를 위해 국제로밍, 부가서비스 등 제공서비스를 확대('12.8월)

□ (서민생활품 유통구조 개선) 기존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수입·유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유통비용을 축소

-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추이, 국내외 가격차, FTA 효과 등을 중점 분석하여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12.9~12월)

<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방안 >

① 대상품목

- 일정기간 가격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예: 라면 등 가공식품, 유아복 등 섬유제품, 참고서 등 출판물)
-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보다 높게 형성된 품목(예: 햄버거, 커피, 생수, 스마트폰, 운동화, 청바지 등)
- FTA 관세인하 효과가 미흡한 품목

② 역할분담

- (가격조사) 통계청, 관세청,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 (방안마련) 지경부, 농식품부, 복지부 등 품목별 소관부처

③ 추진일정

- (‘12.7) 가격동향 조사, 유통구조 개선대상 품목 선정
- (‘12.8) 품목별 원가요인·유통구조·단계별 마진 등 현황 분석
- (‘12.9~12)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

-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설탕 직수입과 대형 유통업체 공급, 할당관세 적용, 사카린 규제 완화 등 지속

* 설탕 할당관세 물량: (12.1~6월) 10만톤 → (12.7~13.6월) 30만톤

- 전국 공영도매시장(33개)의 입지·유통환경을 고려하여 산지(수집기능), 소비지(분산기능), 중앙(물류·정보기능) 도매시장별로 맞춤형 기능 강화

- 온 오프라인 직거래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산자 소비자간 공동농업 방식(CSA)**을 확산하여 생산자 소득증대와 소비자 가격안정 도모

* 상설 직거래장터 확대(연내 35개소), 셀프형 정육식당 개설(연내 31개소), 온라인 직거래 포털 구축(aT 싱싱장터) 등

** 생산자-소비자간 계약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소비 전과정을 협업하는 방식(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 값싸고 질 좋은 수입 원자재 등의 공급을 위해 수입지원 센터, 통합DB 등 수입 인프라 확충방안 마련

○ 병행수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개선*하고 통관 인증제 확대(QR코드 부착)·AS시스템 구축 추진

* 심사기간 단축(15→10일), 담보금 인하(과세가격의 150→120%) 등

□ (소비자 선택권 확대) 저가 신규시장 창출, 가격 차별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

○ 이용빈도가 낮은 고가 품목*을 중심으로 중고·대여시장을 활성화하여 선진적인 소비·나눔문화 확산

* 검토대상품목: 레저등산용품, 가정용 공구 등

○ 지자체별 택시총량제 증차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경형택시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류소비 절감 유도

* '10년부터 성남시에서 시범운영중으로 요금이 중형택시의 78%수준

○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의 상품구성과 가격조건을 차별화*하여 소비자의 알뜰구매 기회 확대

* 날개·조각판매, 낙과피해농산물·유통기한근접 가공식품 저가판매 등

○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를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 시행방안 검토

□ (물가인프라 개선) 물가안정목표제 운영과 소비자물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 '09~'12년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13년 이후의 중기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 결정

○ 소비구조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여 물가지수의 현실설명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주기 단축(5→2~3년)

2. 일자리 창출 모멘텀 유지

□ (청년 일자리 확충) 청년층의 창업·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과의 연계 등 미스매치 해소 유도

-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을 위해 실패시 상환금을 감면하는
융자상환 조정형 청년창업 자금 확대(500→700억원)
- 해외건설 실무학기제 도입, 대학·자치단체가 연계된 맞춤형
글로벌 청년취업지원 확대* 등 청년인력 해외진출 촉진

* ('12년) 500명 → ('13년) 1,000명(중동지역 300명)

- 청년층의 해운인력('20년까지 6,000명 부족)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해선원의 소득세 비과세(현행 월 200만원) 확대

- 청년구직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데 모아 우수중소기업
정보를 개편하고 워크넷·민간취업사이트 등에 제공('12.9월)

* ('12.6~8) 관계부처 TTF 운영, 우수중소기업 정보 개편 등

('12.8~9) 세부시행방안 협의·정보제공, ('12.10) 우수중소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 '12년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추가 확대(13.8→15.3천명*)하고 주5일
수업제 정착 등 인력수요에 맞춰 '13년 전문강사·교원 확충

* 해외 프로젝트, 녹색·신성장산업 분야 등 중심(산은·기은 제외기준)

□ (입직연령 단축) 재학중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조기입학·
졸업 제도를 체계화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시기 단축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진로와 직업' 교과 확충, 직업체험
활성화 등 재학중 진로·직업에 대한 교육 강화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은 학생에게 필요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면제하는 등 유연한 입학·졸업 유도

□ (열린 고용사회 구축) 군복무가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고졸취업자 경력관리 강화

○ 군 특성화고 제도*가 기술 습득(특성화고)-전문분야 복무·진학(유급지원병) 관련분야 취업(전역후)으로 기능하도록 제도 개선

* '12년 현재 10개 군 특성화고 졸업생 800명에 대해 재학중 기술훈련·장학금(150~200만원) 지원후 유급지원병(2년 병사+1년 부사관) 복무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이 군 복무중 기술·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기술병 선발시 우대

* 기술병 모집시 학력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전공학과 배점기준(대졸·전문대졸 최대 35점, 특성화고졸 26점)을 조정하여 불이익 해소

○ 전역후 취업 탐색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역 1~2개월 전에 취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역후 직업훈련·알선 실시

* 취업성공패키지·청년YES프로젝트 지원대상에 전역예정자 추가

○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가 군 입대 후 복직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도입

○ 중소기업(제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학력제한요건을 완화*(12.5)하여 자격을 갖춘 고졸자의 취업기회 제공

* (현행) 전문학사 이상 → (개편) 해당분야 근무경력(1년)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과학고 졸업자

○ 공공기관의 금년도 고졸채용규모를 추가 확대(2.2→2.5천명)하고 고졸채용 가이드라인* 마련(12.7월)

* 대졸자의 하향지원 방지방안, 군미필 고졸자의 군입대에 따른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채용 허용 등

공정경쟁·후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고졸사원의 대학진학시 학비지원·휴가보장 등 제도 체계화(12.1/1분기)

* 기관별·분야별 학비 지원방안, 시험·실습 등 학업관련 휴가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용역 완료 후 가이드라인 마련

-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지원 강화)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연장·전직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직 은퇴자를 적극 활용
-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고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을 개선*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 유도
 - * 지급요건: (현행)근로자대표 동의 → (개선)단체협약·취업규칙
 - 실업급여 수급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65세 이상 퇴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
 - * (현행)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실 → (개선) 65세 이전 고용시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지
 - 전문직 은퇴자들이 컨설팅 인력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KSP 사업 등을 통한 은퇴인력 활용 확대
 - * 컨설팅 대학원 내실화, 중견전문인력 대상 특화형 교육과정 개설 등
 -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구직서비스(고용센터·자치단체·농협 등)와 교육·실습제도 등 지원규모 확대
 - 창업공간 지원을 위해 시니어 비즈플라자를 비수도권으로 확대 설치하고 지원대상 확대('12년 100→'13년 500명)
 - 비즈플라자에 등록한 시니어가 공동창업·창직시 사업 운영비 등(팀당 1,000만원 한도) 신규 지원('12.7월)
-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과밀업종으로의 진입을 최소화하고 한계 자영업자의 업종전환·전직을 적극 지원
- 준비된 창업유도를 위해 창업인턴제 등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기존 민간위탁형 교육방식을 '소상공인전문학교'로 전환
 - * 소상공인전문학교 신설(개): ('12년) 50 → ('13년) 100
 - 정책자금·교육지원을 혁신형 소상공인에 확대·집중하고 과밀업종 진입억제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등 정보제공기능 강화
 - 소상공인센터 등의 업종전환·전직 교육을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12년 8→'13년 10천명 이상)하여 원활한 자영업 구조조정 지원
 - 직업훈련·취업알선 지원대상 전직희망 자영업자 범위 확대*
 - * (현행) 연매출 8천만원 미만(직업훈련·취업알선·취업성공수당 지원) → (개편) 연매출 8천만원~1.5억원 추가(직업훈련·취업알선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

-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취업성공패키지 II)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장년층(최저생계비 200→250% 이하)과 청년층*의 참여범위 확대
 - * 청년층 참여기준: (현행) 졸업후 6개월 → (개편) 졸업학기 종료후 6개월
-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12년말)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복지 보완방안 마련(13.12)
 - *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농업회사법인 설립가능 법인에 '협동조합' 추가, 학술연구용품의 판세감면대상에 '협동조합' 추가 등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취업연계를 위해 자치단체 자립지원직업상담사를 확대
- 미취업 중증·청년 장애인에 대한 직장체험훈련 후 취업 지원프로그램 확대(13년)
- 임시·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혜택을 확대하고 상용직 채용을 유도하는 등 건설근로자 근로복지 증진방안 마련
 - * (예) 퇴직공제부금 일 4,200→5,000원, 지급요건 완화 등
- 사회서비스 등록제 시행(12.8월)에 맞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규모화 방안 마련(12.6)
 - 사회서비스 특성에 따른 차별적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 훈련·자격체계간 호환성 확대

□ (고용창출형 제도 개선)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세제·예산 등 제도 보완

- 고용창출 효과가 제고되도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편
-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삭감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세제감면 일몰기한(12년말) 연장
-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대기업: 20, 중소기업: 30만원) 지원수준 조정 검토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를 강화하고 직업훈련 투자를 확대하여 원활한 신규채용 유도
 - 중소기업-대학이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협약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교육-취업 연계사업 추진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수강시 학점 인정
 - ※ 대기업·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직업 훈련 제공(시설장비·인건비·일반운영비·훈련비 등 지원)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공학교육 인증시 평가결과 활용
 - ※ 평가 이후 1년간의 개선실적을 차기평가지시 반영
- (장시간 근로 개선) 근로제도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유도
 - 노사정위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논의를 통해 장시간근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확대, 근로 시간 특례업종 합리적 조정,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등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주요 장시간 근로 업종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유도
- (노사관계 선진화)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마무리 하고 상생 노사관계로의 전환기반 마련
 - 금년 7월부터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복수노조자문단 등을 통한 밀착형 컨설팅 실시
 - ※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노동법 개정('10.1월)전 복수노조 사업장은 금년 7월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 공공기관, 노사문화 선도기업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노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

3. 생계비 부담 경감

□ (교육비 부담 경감) 자녀 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춰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가계부담을 완화

○ 대학등록금의 기금회계 전출에 대한 지도·감독(전출상한 준수 여부 등)을 강화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내실화*

* 관련 법규 준수여부(학생위원이 전체위원 정수의 30% 이상, 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회의록 공개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입학 아동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지원방안 마련

* (‘12년) 12개 교육청 → (‘13년) 16개 교육청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급대상·지원수준 확충*

* (‘12년) 차상위계층 70%, 연 18만원 → (‘13년) 차상위계층 100%, 연 60만원

□ (주거비 부담 경감) 주택시장의 거래를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서민의 주택구입·주거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했던 규제에 대한 정상화* 지속 추진

* 주택 단기보유후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등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춰(우대형Ⅱ를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 수준으로)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우대형Ⅱ [조건치사항: 소득요건 완화(연 4,500→5,000만원), 대상주택(시가 3→6억원)·지원한도 확대(1→2억원)

○ 1주택자(3→2년 보유)·일시적 2주택자(2→3년내 양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여 주택거래비용 경감

취득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감면 일몰(‘12년말)을 연장하고 일시적 2주택자 기준 완화(2→3년) 검토

- 월세임차인 등에 불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등 임차인 보호·지원 확대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일정요건 하에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보증 지원*(주금공)

※ 보증대상·한도 등 지원요건을 마련하고 필요시 보증재원 확충 추진

- 월세 등 임대료의 소득공제(현행 40%)를 확대

-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노인 요양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의료비 부담 축소

- 하반기부터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병·의원에 당연 적용하여 입원 진료비 경감(환자부담 약 21% 절감)

- 노인틀니 보험 적용·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12.7월) 등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

-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등 취약계층과 은퇴고령자의 건강보험 부담완화 방안 검토

- 다태아 임신 산모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강화('12.7월, 50→70만원) 하고 아동 치아 홈메우기 지원대상* 확대('12.9월)

※ (현행) 만 6~11세, 어금니 1개 → (개편) 11세 미만, 어금니 2개

- (서민 자산형성 지원)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여 중산·서민층의 자산형성 지원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주식펀입비율 40% 이상)에 대해 펀드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4. 사회안전망 내실화

- (일하는 복지 강화) 탈수급 유인을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일과 복지의 연계 강화
 - 탈수급 후 근로장려금 지급까지의 시차를 단축하고 이행 급여 기간중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 근로장려세제(ETC) 대상 사업자 확대방안을 검토('12.16)하고 보험모집인·방문판매인 등에게 근로장려금 지급('12.9월)
 - 장년층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가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취업성공패키지Ⅱ)에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요건 폐지('12.7월)
 - * (현행) 장년층 실업급여 종료 1개월후 참여 → (개선) 종료후 즉시 참여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전국 확대 시행('12.7월)
 - 수급권자에 집중된 복지혜택을 기초-차상위계층간 균형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상별로 단계적 분산·지원하는 방안 검토
 - * 부처별 저소득층 복지사업 조정, 근로·탈수급 유인형 급여체계로의 개편 등
- (맞춤형 복지 확대)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맞춤형 지원 실시
 - 취약계층 복지시설(공공) 개방시간을 '월요일 휴무, 주말 개방'으로 변경하여 취약계층의 이용 접근성 제고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Wee 센터 등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특수교육보조원과 시설·기자재 지원을 확대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노숙인 특성별로(자활·재활·요양 등) 기존 시설을 재편하고 맞춤형 지원 강화

□ (복지전달체계 개선)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복지사업의 효율성 제고

○ 관계부처·자치단체간 T/F 운영 등을 통해 주민센터를 통한 고용-복지 연계통합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주민센터에 고용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일자리 안내 등 기초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고용서비스는 고용센터와 연계 지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시스템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

※ 서비스 제공기관당 연간 220만원 절감 가능 (연간 약 100억원)

** (현행) 계약기간 만료시 카드교체 → (개선) 카드교체 불필요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여 통합사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읍면동 방문형 서비스 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 지역별 다문화가족 분포·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재배치 방안 검토

□ (안전한 생활터전 마련) 생활주변 폭력을 방지하고 질병·재난 등 안전 위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

○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관리를 위한 Wcc 센터 설치와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족단위로 생활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늘리고 폭력피해여성과 동반가족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

○ 수입쇠고기의 국내 유통경로 추적체계 개선, 원산지 표시 단속 등 수입후 사후관리 강화

※ 위해 쇠고기 판매시 자동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업소 인증제 도입

○ 기후변화 대응, 지진·방사능 등 대형 재난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방재투자 확대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에너지시설 개선계획 수립

부처별 정책과제와 추진계획

1. 기획재정부	57
2. 교육과학기술부	58
3. 외교통상부	59
4. 행정안전부	60
5. 문화체육관광부	61
6. 농림수산식품부	62
7. 지식경제부	63
8. 보건복지부	64
9. 환경부	65
10. 고용노동부	66
11. 여성가족부	67
12. 국토해양부	68
13. 공정거래위원회	69
14. 금융위원회	70
15. 방송통신위원회	71
1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72
17. 국세청	73
18. 관세청	74
19. 조달청	75
20. 통계청	76
21. 중소기업청	77
22. 식품의약품안전청	78

기획재정부

① 글로벌 재정위기 대응과 경제체질 개선

- 「경제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대내외 위험요인과 거시건전성을 면밀히 점검
- 급격한 자본유출입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건전소비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가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 개편

② 재정투자 보강과 재정건전성 강화

-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금계획 변경(2.3조원 증액), 공공투자 확대(1.7조원), 이·불용 최소화(4.5조원 수준) 등으로 재정투자 보강
- 재정 조세 지출간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부채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

③ 생활 물가안정

- 기존 유통구조의 비효율성 개선, 수입·유통 인프라 확충 등 서민생활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 구축
-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수산물 수급안정, 석유제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안정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 도모

④ 일자리 창출노력 지속

- 공공기관 채용규모 추가 확대, 고졸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기관 고졸사원 후진학 지원 체계화 등 공공기관 일자리 지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편,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 고용 친화적 세제개편 추진

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글로벌 위상 강화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조업·서비스 산업간 차별사례를 발굴하여 개선방안 마련
- IMF 재원확충 참여, GCF 유치 노력 등 국제기구내 역할을 강화하고, EDCF 등을 활용한 개발원조사업 선진화

교육과학기술부

①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

-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 내 분야별 소위 구성·운영으로 심사 전문화 및 심사기간 단축 등 효율화 추진

② 전문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

- 선도 전문대학 집중 육성 및 대학 특화분야 지원(세계 수준의 전문대학 '12년 11교(7교 추가))

③ 경제교육 강화

- 경제교육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기부를 활용하는 경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 고교 '경제' 교과서 검정심사를 경제연구기관으로 이관하고, 학습 자료 개발, 교사 연수 체계화를 통해 경제교육의 전문성 제고

④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대학의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를 반영
- 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 시에 대학회계의 예·결산 차를 추가로 공시하게 하는 등 정책적 노력 지속 추진

⑤ 특성화고 취업 지원관 확대로 열린 고용사회 구축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들의 팬찮은 일자리 발굴 및 선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11년 102명 → '12년 153명)

⑥ 대학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주요결과를 반영한 교육개선 실적을 공학교육 인증평가 시 고려

⑦ 특성화고 개방형 교장공모 확대로 성장 잠재력 확충

- 특성화고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모 교장으로 임용으로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 확대

⑧ 대학재정의 투명성 제고

- 대학 외부감사 대상 확대(입학정원 1,000명 이상 → 전대학),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 강화 등으로 대학재정의 투명성 제고

외교통상부

①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대

- 동북아 FTA(한·중/한·일/한·중·일)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진행 중인 FTA를 원활하게 추진(한·터키 FTA 발효, 한·콜롬비아 FTA 타결)
- WTO 중심의 무역자유화 협상 및 무역규범 강화 활동 적극 참여를 통해 다자통상체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무역규범 형성에 주도적 역할 수행

② 국제논의 적극 참여 및 국제기구 내 역할 제고

- G20, OECD, APEC, UN ESCAP, 다보스포럼 등 다양한 국제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 입장 반영 및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

③ 에너지·녹색성장 외교강화

- 에너지·녹색분야 주요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우리기업 진출 지원

에너지협력공관을 통해 수집된 주요 에너지 동향 및 입찰정보 등을 기업에 제공하고 시장진출을 지원

재외공관, 에너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적극 해결

- 에너지·녹색성장 국제협력 강화

에너지·녹색성장 분야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 및 기업의 국제프로젝트 참가 지원

- 신재생에너지 사업시장 중요성 증대에 따른 우리 기업진출 기회 확대 모색 및 지원

행정안전부

①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 지방공공요금은 서민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폭 최소화 및 인상시기 분산 유도
- 개인서비스요금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주부물가모니터단(제2기, 723명) 현장활동 강화 등을 통해 민간 자율 안정화 노력 유도
- 시도별 주요 서민생활물가 공개(30종) 및 지방물가정보 공개 서비스(www.mulga.go.kr) 기능 강화 추진

②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연간 2만7천개 제공
* 상반기(3~6월) 참여인원 17,588명(531 기준), 하반기(8~11월) 계획인원 10,000명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육성을 통하여 안정적 주민소득과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 '12년 마을기업 현황: 787개(신규선정 237, 재선정 261, 자립 286)

③ 서민 주거안정 지원

-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일몰('12년말) 연장과 일시적 2주택자 기준 완화(2→3년) 검토

④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 지방세 감면의 단계적 축소('10년 23.2% → '15년 15% 이하)
 - '12년 일몰감면(2.9조원) 중 30~50% 정비 목표, '15년까지 국세 수준('10년 11.6%)으로 정비

다만,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형 감면 등은 지속 지원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본격 운영

자치단체별 재정수지·세입결손·채무증가·자금현황 등 주요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재정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예방

위험이 심각한 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지방채발행 및 신규사업 제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 재정건전화조치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① 계층·지역간 문화향유 격차해소를 위한 생활속 문화복지 강화

-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확대 및 소외지역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주5일수업제에 따른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학생대상 토요일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 체험 기회 제공
- 예술인복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12.11.18)을 통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13.2.18) 여건 마련

②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내수관광 활성화

- 관광숙박시설확충 특별법 제정(12.7.27 시행)에 따른 숙박인프라 확충, 여수박람회 개최(12.5.12~8.12) 계기 관광수용태세 개선, MICE·의료관광 등 전략시장 타깃 마케팅 강화
- 고궁·고택·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자원, 산업시설 및 도시의 고유테마와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

③ 스마트콘텐츠 전략적 육성 및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추진(12.8 시행령 개정) 등 차세대 콘텐츠 산업육성 기반 조성
- 디지털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한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공정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교육 실시

④ 국제스포츠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2012년 런던올림픽 활용 한국 이미지 제고 및 한류 확산 가속화
 - * 제30회 런던올림픽(12.7.27~8.12) 23종목 350여명 참가(세계 10위권 달성목표), 올림픽 기간 중 코리아하우스 운영 및 한국문화축제(12.6.2~9.9, 100일간, 런던) 개최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동계스포츠 경쟁력 강화,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개최 준비
 - * '13충주세계조정선수권, '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등

농림수산식품부

①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농어업 분야 시설현대화를 통한 농어가 경영비 절감, 품질 고급화로 농어업 경쟁력 제고
- 양식 수산물(전복, 김 등) 등 수출전략 품목 육성, 공세적 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해 '12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방지 등 제도개선 및 한식세계화·외식산업 육성

②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계기로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직계열화, 유통시설 보완 및 유통경로의 다양화·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농업관측 및 계약재배사업 운영 내실화
- 고랭지배추 수급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신고제 시범운영
- 국제곡물조달시스템, 해외농어업협력 강화 등을 통한 안정적 식량확보

③ 농어업 분야 성장동력 확충 및 미래준비

- Golden seed project,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 등 농식품 분야 R&D 지원 확대 및 실용화·산업화 촉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업 기반시설 관리강화 및 안정생산을 위한 적응형 품종, 병충해 방제·재배기술 등 개발

④ 농어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지역 활성화

- 농어촌 지역에 주거, 교육, 의료, 교통 등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농·영세농 등에 대한 복지지원 지속
- 귀농·귀촌지원 등을 통한 농어촌 분야 인력유입 및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농어촌 활력 창출

지식경제부

① FTA를 수출·투자 확대의 계기로 적극 활용

- 통합무역정보시스템,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등 기업의 FTA활용 인프라를 지속 개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U턴)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 “U턴수요발굴 → 현지청산 → 국내입지선정” 등 국내복귀 3단계를 일괄지원
- 한·EU, 한·미 FTA 발효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의 호기로 활용, 미국·일본 등 핵심투자국에 대한 적극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② 중소·중견기업이 튼튼한 산업생태계 조성

- 중소·중견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부담 완화, 중견기업 혁신역량 지원 등의 제도적 개선 추진
- 성과공유제 정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정비 등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촉진

③ IT·제조분야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

- IT·주력산업 융합형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
- SW산업의 기술수준·경쟁력 제고, 뿌리산업의 진흥·첨단화 지원을 통해 IT·제조분야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공고화

④ 안정적·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 공급의 토대 마련

- 전력수급 안정화,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추진, 원전의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 도모
 - ※ 충분한 예비전력 확보, “국민발전소” 건설운동 추진 등
- 알뜰주유소 확산 시장 내 경쟁 촉진을 통해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기반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

보건복지부

① 친서민 보건의료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 선진화

-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시행(11월)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
- 연구개발 투자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약가우대·세제지원 등을 통해 제약산업 선진화 유도
- 해외환자 유치업자 업무범위 확대 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의료법 개정 추진)

② 서민과 중산층 부담 경감

-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다태아 임신 산모 진료비 지원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7월)
- 병의원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적용, 입원진료비 경감(환자부담 21% 경감)
-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등 취약계층과 은퇴고령자의 건강보험 부담완화 방안 검토
-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 지정('12. F 100개소)하고, 입소 우선순위기준을 법제화하여 실수요층의 어린이집 이용 확대

③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일을 통한 복지' 활성화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구축을 완료하여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센터를 통한 고용 복지 연계통합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여 기관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
- 저소득층 취업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희망리본프로젝트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및 지역-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인프라 역량강화 추진

환경부

①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에 대한 엄격한 목표설정 체계 구축 및 목표달성 점검·평가 강화로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
- 기후변화·녹색성장 등 국제적 환경의제 주도 및 협력 증진

②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

-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 및 화학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도입(관련법률 9월중 국회 제출)
- “생활공감 환경보건 R&D”(21년까지 총 1,792억원 투자) 사업 및 농어촌지역 등 슬레이트 처리(10,000동) 지원 사업 추진

③ 생태가치 제고 및 생물자원의 현명한 이용

- 훼손지 복원(16개소, 123억원) 및 국립공원 신규지정 등 자연환경 보호지역 확대 추진
- 생물자원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생물자원 유용성 평가기준 마련

④ 안전한 물 환경 조성

- 수생태 건강성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11년 31.8%→12년 38.7%), 114개 중권역 좋은물(BOD기준) 달성(82%)
- 상수관망 개선 민간투자 도입, 물절약 투자대행사업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및 도심침수 예방 기후적응형 하수도 기능 강화

⑤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 신흥·특새시장 개척을 위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환경산업 수출(1조원) 증대, 환경기술인력 양성(110명) 등 환경산업 기반강화 추진

⑥ 폐자원 에너지화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 폐자원에너지화를 촉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량(8백만 m^3), 매립가스 발전량 및 고형연료제품 공급량을 증대
- 폐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폐기물거래소(가칭) 구축

고용노동부

① 열린고용사회 구축 지원 및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 전역예정자 대상 취업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전역 후 직업 훈련·알선 실시(취업성공패키지·청년 YES 프로젝트 등)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확대 및 직업훈련과정 수강시 학점 인정

② 청년·고령자·여성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 맞춤형 글로벌 청년취업지원 확대(500→1,000명) 및 중소기업 취업정보 제공 강화(중소기업정보 워크넷 등 제공)
- 장년 대상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및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요건 개선(단협·취업규칙) 등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시행,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원수준(대기업 20, 중소기업 30만원) 조정 검토

③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중장년층(최저생계비 200→250%이하 등)과 청년층(졸업후 6개월→졸업학기 종료후 6개월)의 참여범위 확대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전국 확대 시행('12.7월)
- 실업급여 수급연령 제한 완화를 통한 65세 이상 퇴직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 지원
- 임시·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혜택 확대

④ 일자리 친화적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정착 지원

- 근로시간 제도의 탄력적 개편 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노사정위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논의 등)
- 7월부터 적용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사업장에 대한 밀착형컨설팅(복수노조자문단 등) 등 지원

여성가족부

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 새일센터 대상 컨설팅 및 취업설계사 교육 실시로 새일센터간 서비스 품질을 상향평준화하여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강화

② 감소한 혼례문화 확산

- 예비부부와 부모대상 교육 및 정보제공, 공공시설 혼인예식장으로 개방, 모범사례 발굴·전파 등 범정부적 대책 추진 및 이행 점검

③ 자녀돌봄서비스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개편, 서비스 비용 경감, 민간육아도우미 시범교육 실시를 통하여 서비스 지원 강화 및 품질 제고

④ 다문화가족 사회적응지원

- 다문화가족 추이와 욕구 변화, 다문화사회 전망 등을 반영하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수립
- 제2차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실시,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한국인배우자, 자녀의 현황 및 정책수요 파악으로 맞춤형 지원 강화

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족단위로 생활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늘리고 폭력피해여성과 동반가족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

※ 가족보호시설('11년 8→'12년 13호), 주거지원시설('11년 82→'12년 118호)

⑥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 학업중단청소년의 발굴기제 다양화, 서비스 이력관리 등을 통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국토해양부

①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강화

- 분양가 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자금·세제 등 지원 확대로 실수요자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여 주택거래를 정상화
- 보금자리주택 15만호 공급, 맞춤형 중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 규제 개선으로 재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② 국토해양산업의 선진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 건설사 상생협력펀드 확대 등 금융지원과 건전성 제고로 건설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해외도시개발 수출, 중동국부펀드 활용 등으로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을 촉진하고, 여수엑스포를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③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지 등 남은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하천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이용모델을 구축하여 4대강 성과 확산

④ 저탄소 녹색국토공간 적극 구현

- (교통) KTX·급행열차 운행확대 및 간선·광역철도망을 지속 구축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대중교통 인프라도 확충
- (건축) 건축물 에너지 관리 강화(9월) 및 그린리모델링 기반을 구축(12월)하고,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물류) 에너지 목표관리제(28→50개) 등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 물류기업을 확대하고,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범사업도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하여 구두발주,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지속 확산하고, 이행평가 포털 구축 등을 통해 협약제도를 더욱 내실화
- 핫라인 설치,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위반행위 포착시 엄중 제재
- 피자·치킨 등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마련 및 감사·제재 강화를 통해 가맹사업 공정거래질서 확립

② 소비자 참여 및 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 행태 개선

- K 권슈머리포트 등 소비자 정보생산·제공을 지속 확대하여 시장변화의 주역으로서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
- 기업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손해배상소송 지원 확대 등 민사구제시스템을 확충
-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집행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환경을 구축하여 온라인사업자들과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 간 경쟁을 촉진

③ 담합 등 불공정거래 및 대기업 경제력집중에 대한 대응

- 국민생활 밀접품목 등을 중심으로 가격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
- 지속적인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독과점산업 시장분석 체계화 등을 통해 경쟁적인 시장구조 형성 노력을 강화
- 복잡한 주식소유 현황 등 대기업집단 정보분석·공개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감시시스템을 확충하여 자율적 경영행태 개선을 유도
- 독립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여건을 저해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

금융위원회

① 위기대응능력 제고 및 금융시스템의 경쟁력 강화

- 가계부채 구조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취약부문 점검을 강화하고, 커머드본드 법제화 추진 등 은행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촉진
- 저축은행 부실위험 예방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보완하고 바젤Ⅲ 시행에 대비하여 은행의 자본규제체계를 정비
- 저축은행과 은행의 연계영업을 허용하고, 자본시장제도와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금융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별 체계로 전환

②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및 실물경제 지원 강화

- 산은·기은 등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3조원 규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투자와 대출방식으로 병행 지원
- PF 정상화뱅크 확충*, P CBO 발행(3조원),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간 분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건설사 경영정상화 유도
* 2조원 규모의 은행권 PF채권을 추가 매입하여 PF정상화 유도
- 연대보증제도 개선, 면책제도 개선,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 신설 등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③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베이비부머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노후생활 안정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 (현행) 주택소유자·배우자 모두 (X)세 이상 → (개편) 주택소유자 (X)세 이상
-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일정요건 하에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보증지원(주금공)
- 금리우대 보증자리론 금리를 낮춰(우대형Ⅱ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
-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미소금융을 통해 청년·대학생에게 학자금 전환대출·긴급 생활자금대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①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고도화

- 클라우드·근접통신·3D방송 서비스 활성화 및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기반 구축 등 스마트 전략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방송통신 신산업 창출
- 인터넷 스타트업(신생벤처) 발굴 및 육성 등 중소벤처 투자·인재·기술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 성장 중심의 혁신적 스마트 생태계 조성
- Giga인터넷 상용서비스 도입 확대 등 유선 네트워크 고도화와 전파사용료 감면을 통한 네트워크 투자 유도로 네트워크 경쟁력 확립

② 품격 높은 방송구현 및 미디어 경쟁력 제고

-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성공적 종료와 방송의 공익성 제고 등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및 품격 높은 공공 방송 구현
- 방송광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광고 규제완화 및 스마트광고 활성화 등 광고시장 확대를 통한 미디어산업 견인
-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기반 지원,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등 방송통신 콘텐츠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③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증대 및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

- 통신이용 접근성 및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 개선 등 방송통신 복지 구현
- 서비스 이용제도 개선, 품질정보 공개 등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방송통신서비스 사후규제 기반조성 및 이용자보호 시책 강화
-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및 전자파에 안전한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건전하고 안전한 스마트 문화 구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강화

- (녹색·신성장) '13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시 녹색기술 및 신성장 동력 지원 등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R&D 규모 결정
 -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핵심기술 분야 및 기초연구 중점 투자
-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R&D투자 확대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연구인력(고용지원, 인력파견 등) 지원을 강화
- (서비스 R&D 활성화) 제조업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에 대한 R&D를 강화
 - 서비스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범부처 추진체계 정립 및 국민체감형 서비스 R&D를 추진

② 선진적 연구환경 조성 지원

- (연구제도 선진화) 상반기 연구관리제도 개선사항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도전적·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노력
- (출연연 지원)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 직접 출연금 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추진 (관련 법안 국회 제출)

③ 미래지향적 이공계 인재 양성

- (인재양성) 이공계의 미래성장과 행복추구를 위한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 본격 추진 ('12.5. 국과위 심의·확정)
 - ※ 1.창의융합적 교육연구 토양 정착 2.희망찬 청년 일자리 창출 3.재직자 친화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 4.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역량제고 5.이공계의 사회경제적 공헌 및 책임 구현
- (이행관리) 생애주기별(교육·사회진출·재·퇴직) 인력양성·활용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관계부처 추진 이행사항 점검

국 세 청

① 숨은 세원 발굴·추적을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 확대·개편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기능을 활성화하여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 과세당국간 국제공조 활성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처벌 강화를 통해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강력 대처
-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신고성실도 검증 강화
- 세무조사시 비자금 조성 등 조세범칙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FIU자료를 적극 요청·활용

②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확대

- 전통재래시장 등 영세납세자에 대하여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불복청구 시 도우미 지정·입증요건 완화 등 권리구제 강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증가된 근로장려금 지급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수급대상가구가 90만가구로 73%↑)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성실중소기업은 사무실조사 위주의 간편조사 활성화

③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세정시스템 구축

- 세정환경 변화에 맞춰 현장중심의 효율적 세원관리와 탈세 혐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 지식관리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세원현장의 문제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품질 지식D/B 구축
- 미래 세정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탈세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세행정 분야별 미래전략 수립

관 세 청

① FTA 활용제고를 위한 총력지원

- 개별 기업실정에 맞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실시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지원
- FTA PASS 추가 개발, 원산지 관리사제도 활성화, FTA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FTA 활용관련 인프라 확충

* 기업 ERI와 FTA-PASS(원산지관리시스템) 호환성 증진 및 간편 FTA-PASS 개발

②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 세수지표 일일 모니터링, 월별 세수실적 분석 등 세수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제공(7월) 등을 통해 성실납세 환경 조성
- 위험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7월), 고위험 농산물(6대)^{**}·업체(80개)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세액탈루에 엄정 대응

* 수입신고가격, 재무제표상의 매출이익률 등 변동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콩나물 콩, 기타 대두, 팥, 녹두, 생강, 메밀

③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품목 확대, 할당관세 품목의 조기반출 명령 등을 통해 물가관리대상 수입품목의 조기시장공급으로 가격안정 유도
- 병행수입 물품의 통관심사기간 단축, 통관담보금 인하, 통관인증제 도입 등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독점 수입물품에 대한 경쟁환경 조성

④ 공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관세환급 등 관세행정상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
-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FTA 활용· AEO 인증 관련 민간컨설팅 확대 및 예산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과 보호 정책 확대 시행

* (12년 예산) FTA 컨설팅 지원예산: 7.5억원, AEO 인증지원예산: 9억원

조 달 청

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

- 대·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대형 IT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비율을 50%까지 확대
- 시장현실에 맞게 중소기업간 경쟁 품목을 조정(중기청 협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가점 제도를 보완하는 등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정부조달 민·관 협력단 해외 파견, 맞춤형 시장 진출 전략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 지원

② 기술·품질 최우선의 조달제도 운영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 우수조달물품 선정시 기술·성능 향상 여부 평가를 강화하고, 기술우수제품의 공공판로 확대를 통한 기술개발 유도
-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 추가 지정, 공공공사 설계에 녹색 제품 반영 확대 등을 통해 녹색기술·기업 육성 지원

③ 조달시장에 공정한 경쟁문화 정립

- 사회보험 미가입,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보훈·복지단체 명의 대여 등 위법·편법적인 행위를 하는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방지
- IT 용역 평가위원 정비, 평가결과 공개 등을 통해 각종 심의와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④ 원자재 비축 확대 등으로 원자재 위기대응능력 확충

-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공동비축을 활성화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기를 활용하여 비축재고를 확대
- 중소기업에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축 품목 다양화 및 원자재 방출 방법 개선

통 계 청

① 성장기반 확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 개발·정비

- (경기종합지수) 경기 설명력 및 예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와 작성방식을 변경
 - ※ 선행종합지수를 동행종합지수처럼 순환변동치 방식으로 작성
- (서비스업통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망서비스 분야별로 서비스업 관련 통계 정비
 - ※ 서비스업 범위 재정립, 유망서비스 분야별로 통계 세분화, 기존 통계의 조사방법·범위 통일성 제고 등
- (기업생멸통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창출기업, 퇴출기업, 기업생존율 등 기업생멸통계 개발

② 민생안정과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 개발·개선

- (가구종합패널) 생활수준, 재무건전성 등의 변화를 측정하여 복지, 재정 및 금융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가구종합패널조사 실시
 - ※ 가계의 소득, 소비, 자산·부채, 경제활동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
- (외국인고용통계) 외국인 국내 체류 140만명 시대에 대비한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통계 생산
 - ※ 외국인력 규모, 고용률, 실업률, 취업분야 등 고용현황
- (사회지표개편) 다문화사회 진전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지표 체계를 개선

③ 행정자료 활용 등을 통해 통계의 생산성 제고

- (임금근로) 성별, 연령별, 기업체 규모별, 기업체형태별 산업분류별 일자리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개발
- (주택소유) 2010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주택관리대장 등 행정 자료를 연계하여 개인별·가구별·연령대별 주택소유 현황 작성
- (나라통계시스템) 모든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기획에서 생산, 서비스, 자료보관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국가통계품질 개선

중소기업청

① 청년창업 등 창업활성화 및 고졸채용 확산

- 금년 도입한 청년전용창업자금(1,300억원)을 시장수요에 맞게 개선
- 창업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초기기업 전용 펀드’ 1,000억원 조성 및美진출 기업 투자를 위한 “코러스 펀드” 결성
- 아이디어만 있으면 디자인에서 설계·모형까지 일괄 제작 가능한 “시제품제작터 (Tech Shop)” 설치
 - * TechShop : '07년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하여 미국전역으로 확산 (6개)
- 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업체 선정요건 완화하고, 「취업하고 싶은 중소기업」 선정 등을 통해 ‘고졸인력 채용’을 활성화

② FTA 대응능력 제고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FTA 타겟기업 및 유망품목 중심의 전시회·시장개척단, 해외 규격인증 지원 및 해외 대형 유통망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 R&D지원사업간 유사사업 통폐합, 평가절차 단순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편의성 제고 및 기술개발 역량강화
- 중소기업 재정지원 효율화방안을 수립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

③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 및 서민경제 활성화

-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82개)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공표 및 서비스업종 신규지정 검토
- 1만개 골목수퍼를 현대식 나들가게로 개량하고, 동네빵집의 선도 모델샵을 개발하여 협동화·조직화 추진
-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계정의 차질 없는 신설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

① 위해(risk)에 따른 식의약 사전예방 안전관리 추진

- 부패·변질우려가 높거나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수입식품 검사체제로 개편
 - * 일본산 방사능 수입식품 검사 철저 시행
- 단계별 해썹(HACCP) 의무화 추진 및 중소·영세 식품업체 우수위생관리기준(Good Hygiene Practice) 마련
 - * 해썹 적용비율 확대(5.2% → 11%, 2,500개소)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1·2등급) 허가에 대한 민간 기관 인증제 도입

② 첨단바이오신약·융복합 의료기기 등 신속한 제품화 지원

- 한 미 FTA에 따른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시행에 대비, 특허목록등재 등 전담심사체계 운영
- 줄기세포치료제, u-헬스케어 등 첨단제품에 대한 허가 신속화·전문화로 성공모델 창출 기여
 - * 품목별 전담관리(Project manager), 사전검토제 운영으로 허가기간 단축 및 제품개발 시행착오 최소화, 해외석학 자문단 활용을 통한 전문성 제고

③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식의약 규제로 국민 신뢰 제고

- 식품의 합리적인 유통·소비를 위한 소비기한 제도 도입
 - * 소비자 인식 고려, 품목별로 유통기한과 병행
- 과학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의약품 재분류 추진
 - * 의약품 품목갱신제 도입('13.1)에 따른 전문/일반 상시분류체계 운영
- 의료기기 허가정보 공개를 위한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및 전자표시기재(e-labeling) 도입으로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